

발간등록번호

© 2008-61 | 2008.12 |

11-1541000-000394-01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문호 김정섭 허주녕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1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구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 |
|-------|-----------|
| 박 문 호 | 연 구 위 원 |
| 김 정 섭 | 전 문 연 구 원 |
| 허 주 념 | 전 문 연 구 원 |

머 리 말

재촌농가의 농업인력 재생산 기반이 붕괴된 현상황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 쌓았고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귀농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귀농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농어촌 이주 도시민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농촌생활에 따른 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등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했다.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종전의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한 쾌적한 정주환경까지를 고려한 종합지원방식으로서 처음 시도되는 귀농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하도록, 정착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귀농 및 귀촌 공동체 또는 사회집단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 및 자료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례 지역 귀농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촌 뉴타운’의 안정적인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이 연구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하도록, 정착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개발 내용은 첫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을 농어촌 인구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측면에서 정책의 필요성 부각하였다. 둘째, 귀농 및 귀촌 공동체 또는 사회집단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후계자 보유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영승계의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지역의 과소화 유발에 따른 폐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구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가구의 소비, 복지등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농산업의 지속성과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 재촌농가의 농업인력 재생산 기반이 붕괴된 현상황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하여 농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 쌓았고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귀농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도 귀농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농어촌 이주 도시민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농촌생활에 따른 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등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했다.
-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종전의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한 쾌적한 정주환경까지를 고려한 종합지원방식으로서 처음 시도되는 귀농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농어촌뉴타운”이 낙후된 주변지역의 고령농업인과 융화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선진적인 지역만들기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주택, 생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의 각종혜택이 집중될 경우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기존마을과 격리된 독립형 주택단지는 기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 다양한 귀농사례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귀농자 집단의 형성이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지되어야 함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전업적인 농업활동만으로는 귀농자 가구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에서 겸업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정착률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 정착단계에 접어든 귀농자 집단들이 지역사회에서 영농활동 외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앞의 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몇 가지 제공한다.

- 첫째, 도시에서 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얻은 귀농자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귀중한 인적 자본으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 둘째, 사례들에서 현저하게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귀농자들의 활동 내용은 ‘도농교류’, ‘귀농·귀촌 지원활동’,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 ‘마을단위 개발사업 참여’ 등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귀농하기 전에 영위했던 도시적 생활의 경험과 귀농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귀농 이후에 도농교류나 귀농·귀촌 지원 활동과 같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동기와 역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마을 단위의 귀농자 공동체나 개별 귀농자 사례와는 달리 읍·면 내에 상당수의 귀농자들이 존재하는 거점형 귀농 사례들(진안-1, 홍성, 남원)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활동이 현저하다. 이는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속한 읍·면 수준 지역사회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 한편, 전문가 토론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과정의 단계별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야 한다.
- 둘째, 사업추진 지역의 기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셋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경제활동, 지역사회 통합 등 다각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넷째, 귀농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주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주 후 적응과정을 돕는 데에는 민간부문의 전문가 또는 NGO의 참여가 필요하다.

- 다섯째, 귀농자들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체에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성공적인 지역 내 정착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먼저,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입주 전’과 ‘입주 후’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단계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 입주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 이주하려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보(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생활에 필요한 의료·교육 등 서비스 공급 실태)
 - 기초적인 영농 기술
 - 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관한 정보
 - 주택, 경관 등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입주 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적합한 품목 선정과 재배(또는 사육) 기술에 대한 심화된 교육(예: 지역 영농조직에서의 인턴 연수제도)
 -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농지, 농기계 등)
 -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 귀농가구의 겸업소득 기회(예: 지역사회 문화·복지·교육·평생학습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비농업 부문 취업 알선)
 -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 지역사회 정착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수시적 상담과 조언(예: 귀농자 멘토링)

- 둘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성될 농어촌뉴타운의 입주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기존 주민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 양성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당초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 전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이해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 기존 주민과 입주예정자 간 친교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와 주민 간 친교 프로그램(예: 만남의 날 행사 등)
 - 기존 주민이 주도하는 입주자에 대한 지역이해 프로그램(예: 지역투어 및 상담 등)
 - 농어촌뉴타운에 조성될 커뮤니티 공동시설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기존 주민과 주민의 협력적 설계 활동
 - 기존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 증진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권역에서 각종 소득개발 정책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와 기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사업 지원 프로그램(예: 특화작물단지 조성, 공동농식품 가공·유통 법인 창립 지원 등)
 - 기존 주민의 복지·문화·교육여건 개선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관련 개발사업 연계 추진(예: 거점면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의 인적 역량을 활용한 ‘자치적 복지 프로그램’ (예: 방과 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 재가노인 복지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 셋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담당 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어촌뉴타운 조성에 따르는 하드웨어 정비(부지 확보 및 건축과 관련된 과업)
 - 지역사회 주민 및 지역 밖의 잠재적 입주자에 대한 홍보
 - 입주자의 입주 전·후 단계 소프트웨어적 지원(각종 상담, 교육, 자금지원 등과 관련된 과업)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와 조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외 민간부문 단체, 주민, 입주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농촌 시·군의 어느 한 실과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전담할 부서 또는 TF팀을 구성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예: 진안군의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2
- 3. 연구방법 3

제2장 농업인력 및 농촌 뉴타운 조성정책의 의의

- 1. 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4
- 2. 농업경영주의 변화와 경영 승계의 전망 8
- 3. 농어촌 뉴타운 조성정책 10

제3장 우리나라의 귀농 현황과 정책

- 1. 귀농 현황과 애로사항 19
- 2. 귀농 정책의 동향 26

제4장 귀농 정착사례 분석과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요구

- 1. 사례 조사·분석 개요 47
- 2.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유형 분석 49
- 3. 전문가 토론 52
- 4.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정책 프로그램 개발 요구 .. 53
- 5.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54

제5장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프로그램 구상

- 1. 프로그램 구상의 관점 58

| | |
|-----------------------|-----|
| 2. 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 | 59 |
| 3. 세부 프로그램 구상 | 60 |
| | |
| 부 록 1 | 82 |
| | |
| 부 록 2 | 103 |
| | |
| 참고문헌 | 113 |

표 차 례

제1장

| | |
|--|---|
| 표 1.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관련 정책개발 과정 | 3 |
|--|---|

제2장

| | |
|------------------------------------|----|
| 표 2-1. 연령별·성별 농가인구(남자) | 5 |
| 표 2-2.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분포 | 6 |
| 표 2-3.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 | 6 |
| 표 2-4. 농가인구 장래 추계 | 7 |
| 표 2-5.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 9 |
| 표 2-6.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예측 | 9 |
| 표 2-7.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 | 10 |

제3장

| | |
|-------------------------|----|
| 표 3-1. 연도별 귀농 현황 | 19 |
| 표 3-2. 마을단위 지원사업 | 30 |
| 표 3-3. 신규인력 유입 정책 | 32 |

제4장

| | |
|------------------------------------|----|
| 표 4-1. 분석 대상 자료의 출처와 성격 | 48 |
| 표 4-2. 귀농자 지역사회 참여 활동 유형별 분포 | 50 |
| 표 4-3. 전문가 토론 일정 요약 | 52 |

그림 차례

제2장

| | |
|----------------------------------|----|
| 그림 2-1. 농어촌 뉴타운 프로그램 체계 | 14 |
| 그림 2-2.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체계 | 16 |

제3장

| | |
|---|----|
| 그림 3-1. 농촌생활 만족도 | 20 |
| 그림 3-2. 농촌생활 편의성에 대한 불만도 | 20 |
| 그림 3-3. 농어촌 이주의 불안요인 | 21 |
| 그림 3-4. 농어촌 이주 지원사항 | 22 |
| 그림 3-5. 농어촌 거주지역 생활여건 농촌생활 만족도 | 22 |
| 그림 3-6. 농어촌 생활 만족도 | 23 |
| 그림 3-7. 거주지역의 제공 서비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될 사항 | 24 |
| 그림 3-8. 귀농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주체 | 27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로 지역사회 유지·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지역이 많다. 최근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15년 경 인구 2,000명 미만인 면의 수는 558개로 늘어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공급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면 지역의 수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 한편,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향은 상당한 정도까지 축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민의 56.3%가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민은 4.1%에 달한다(송미령·김정섭, 2008).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프로그램 사업 등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들어서는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자들을 지역농업의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의 ‘농어촌뉴타운 조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이 연구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하도록, 정착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 농어촌뉴타운 조성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 농어촌 인구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측면에서 정책의 필요성 부각
 - 농어업 인력 재생산 측면
 - 농어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적 잠재력 측면
- 귀농 및 귀촌 공동체 또는 사회집단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사례 분석
 - 지역농업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의 사례 분석
 - 지역사회의 자치적 복지 기능 측면에서의 사례 분석
 - 귀농 및 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사례 분석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 농어업 경영 관련 프로그램
 - 교육, 문화, 의료 등 지역사회 복지기능 관련 프로그램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참여 관련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조성·운영 모델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뉴타운 거주 주민 지원 시책 방향과 내용

3. 연구방법

표 1.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관련 정책개발 과정

| 정책개발 | 세부 내용 | 방법 | 수집 및 분석 대상 |
|-----------------------|--|------------------------------------|---|
| 1. 농어촌뉴타운 관련 정책 이슈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정착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식별 | 문헌연구 통계분석 심층면접 전문가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자료 • 귀농자들의 정착사례 소개 자료 • 귀농 지원 사회단체 활동가 |
| 2. 정책 이슈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들이 정착과정에 직면하는 어려움의 원인 분석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형성 관련 정책요구 분석 | 심층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 귀농 지원 담당 지자체 공무원 • 귀농 지원 사회단체 활동가 |
| 3. 대안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들의 농어업경영 관련 활동 분야 지원 프로그램 • 지역사회 자치적 복지 관련 참여 활동 분야 지원 프로그램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 관련 참여 활동 분야 지원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운영 방안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전문가 자문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운영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심층면접 (국내 사례), 문헌연구 (해외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 귀농 지원 담당 지자체 공무원 • 귀농 지원 사회단체 활동가 • 외국의 귀농 관련 지원시책 소개 자료 |
| 4.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운영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전문가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연구자 • 귀농 지원 담당 지자체 공무원 • 귀농 지원 사회단체 활동가 |

제 2 장

농업인력 및 농촌 뉴타운 조성정책의 의의

1. 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1.1. 농가인구의 연령 구성

-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90년에는 10대가 최빈층이고 50대가 다음으로 많았으나, 1995년에는 50대가 최빈층이고 60대가 다음으로 많으며, 2000년 이후에는 60대가 최빈층을 형성하고 50대가 다음으로 많다. 즉, 1990년 이후 50대 이상 계층이 그대로 상향이동하여 고령농가로 잔류하는 경향이 있다.

표 2-1. 연령별·성별 농가인구(남자)

| 연령 | 1990 | | 1995 | | 2000 | | 2005 | |
|--------|---------|-------|---------|-------|---------|-------|---------|-------|
| | 농가인구 | 비율 | 농가인구 | 비율 | 농가인구 | 비율 | 농가인구 | 비율 |
| 전 체 | 3,279천명 | 100.0 | 2,373천명 | 100.0 | 1,971천명 | 100.0 | 1,677천명 | 100.0 |
| 0~9세 | 347,157 | 10.6 | 169,703 | 7.2 | 137,491 | 7.0 | 96,231 | 5.7 |
| 10~19세 | 730,984 | 22.3 | 394,667 | 16.6 | 238,650 | 12.1 | 165,164 | 9.9 |
| 20~29세 | 462,194 | 14.1 | 328,688 | 13.9 | 239,437 | 12.1 | 160,700 | 9.6 |
| 30~39세 | 328,035 | 10.0 | 237,085 | 10.0 | 187,181 | 9.5 | 138,612 | 8.3 |
| 40~49세 | 366,629 | 11.2 | 279,190 | 11.8 | 255,000 | 12.9 | 216,360 | 12.9 |
| 50~59세 | 513,061 | 15.6 | 393,748 | 16.6 | 310,540 | 15.8 | 281,596 | 16.8 |
| 60~69세 | 345,710 | 10.5 | 368,640 | 15.5 | 392,891 | 19.9 | 351,913 | 21.0 |
| 70~79세 | 153,174 | 4.7 | 166,246 | 7.0 | 173,334 | 8.8 | 222,596 | 13.3 |
| 80세 이상 | 31,820 | 1.0 | 35,032 | 1.5 | 36,465 | 1.9 | 43,420 | 2.6 |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농가의 인구구조를 유소년 인구(0~14세), 청장년 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 3대 연령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 현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말한다.
- 농가의 고령화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05년 전국 평균 고령화지수보다 5배 이상인 298,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보다 3배인 47.6을 나타낸다. 즉, 생산가능인구 약 47명이 고령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표 2-2.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분포

| 구분 | 1990 | | 1995 | | 2000 | | 2005 | |
|-----------|-----------|-------|-----------|-------|-----------|-------|-----------|-------|
|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 합 계 | 6,661,322 | 100.0 | 4,851,080 | 100.0 | 4,031,065 | 100.0 | 3,433,573 | 100.0 |
| 0~14세 | 1,370,335 | 20.6 | 680,232 | 14.0 | 458,775 | 11.4 | 335,085 | 9.8 |
| 15~64세 | 4,521,790 | 67.9 | 3,386,147 | 69.8 | 2,696,281 | 66.9 | 2,099,182 | 61.1 |
| 65세 이상 | 769,197 | 11.5 | 784,701 | 16.2 | 876,009 | 21.7 | 999,306 | 29.1 |
| 고령화지수 | 56.1 | | 115.4 | | 190.9 | | 298.2 | |
| 잠재적 노년부양비 | 17.0 | | 23.2 | | 32.5 | | 47.6 | |

주: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1.2. 농업종사자의 연령 구성

-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같은 경향으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력의 진입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기존 인력이 5년 단위로 최빈층이 고령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 2-3.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

단위: 천명, %

| | 합 계 | 20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
|------|----------------|--------------|--------------|--------------|--------------|--------------|--------------|---------------|---------------|---------------|--------------|--------------|--------------|--------------|
| | | 미만 | 24 | 29 | 34 | 39 | 44 | 49 | 54 | 59 | 64 | 69 | 74 | 이상 |
| 1990 | 4,240 (100) | 277 (6.5) | 240 (5.7) | 246 (5.8) | 302 (7.1) | 311 (7.3) | 343 (8.1) | 426 (10.0) | 560 (13.2) | 534 (12.6) | 406 (9.6) | 298 (7.0) | 171 (4.0) | 127 (3.0) |
| 1995 | 3,294 (100) | 95 2.9 | 125 3.8 | 135 4.1 | 166 5.0 | 242 7.3 | 268 8.1 | 300 9.1 | 371 11.3 | 481 14.6 | 462 14.0 | 308 9.4 | 198 6.0 | 143 4.3 |
| 2000 | 3,572 (100) | 262 7.3 | 20 6.2 | 197 5.5 | 155 4.3 | 197 5.5 | 260 7.3 | 272 7.6 | 307 8.6 | 370 10.3 | 457 12.8 | 389 10.9 | 236 6.6 | 251 7.0 |
| 2005 | 3,098 (100) | 158 5.1 | 149 4.8 | 143 4.6 | 119 3.8 | 129 4.2 | 185 6.0 | 264 8.5 | 284 9.2 | 316 10.2 | 352 11.4 | 408 13.2 | 309 10.0 | 282 9.1 |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1.3. 농가인구의 전망

- 농가인구 추정은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농가인구의 증감률이 시간에 동일하게 변화하고 연령별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불변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등과 연계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2015년의 농가인구 추계 결과에서 농가인구는 2010년에 70세 계층이 최빈수를 나타내면서 50~70세 계층이 두터운 벽을 형성하는 ‘역삼각형’ 형태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결론 적령기에 해당하는 25~30세 계층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농가인구 장래 추계

단위 : 천명

| 연령 · 성별 | | 연 도 | | | |
|-----------------|-----|------------------|------------------|------------------|------------------|
| |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 전 체 | 합 계 | 4,031 (100.0) | 3,434 (100.0) | 2,941 (100.0) | 2,284 (100.0) |
| | 남 자 | 1,971 | 1,677 | 1,431 | 1,105 |
| | 여 자 | 2,060 | 1,757 | 1,510 | 1,179 |
| 유소년 (0~14세) | 합 계 | 459 (11.4) | 335 (9.8) | 236 (8.0) | 143 (6.3) |
| | 남 자 | 242 | 178 | 124 | 74 |
| | 여 자 | 217 | 157 | 112 | 69 |
| 청장년 (15~64세) | 합 계 | 2,696 (66.9) | 2,099 (61.1) | 1,704 (57.9) | 1,272 (55.7) |
| | 남 자 | 1,338 | 1,041 | 855 | 637 |
| | 여 자 | 1,359 | 1,058 | 849 | 636 |
| 노 년 (65세 이상) | 합 계 | 876 (21.7) | 999 (29.1) | 1,000 (34.0) | 869 (38.0) |
| | 남 자 | 392 | 457 | 454 | 393 |
| | 여 자 | 484 | 542 | 547 | 476 |

1.4 농촌지역 마을의 과소화 동향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활력 저하로 인해 지역사회의 유지·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지역이 많다.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면 평균 인구는 약 3,984명이다. 거주 인구 2,000명 미만인 면 지역은 287개로 전체 면의 23.9%를 차지한다.
 - 최근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15년 경 인구 2,000명 미만인 면의 수는 558개로 늘어나 전체 면의 4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 공급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면 지역의 수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채종현 등, 2007).

2. 농업경영주의 변화와 경영 승계의 전망

2.1.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 농업경영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은 1990년 31.3%에서 '95년 42.3%, '00년 51.1% '05년 58.3%등으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95년까지 50대가 최빈층을 이루었으나 '00년 이후에는 60대로 상향이동하고 있다.

표 2-5.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 연령별 연도 | 1990 | | 1995 | | 2000 | | 2005 | |
|-----------|-----------|-------|-----------|-------|-----------|-------|-----------|-------|
|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 전 체 | 1,767,033 | 100.0 | 1,500,745 | 100.0 | 1,383,468 | 100.0 | 1,272,908 | 100.0 |
| 20세 미만 | 451 | 0.0 | 94 | 0.0 | 43 | 0.0 | 0 | 0.0 |
| 20 ~ 29세 | 36,268 | 2.1 | 12,217 | 0.8 | 7,227 | 0.6 | 2,382 | 0.2 |
| 30 ~ 39세 | 221,177 | 12.5 | 134,201 | 8.9 | 84,246 | 6.1 | 40,010 | 3.1 |
| 40 ~ 49세 | 372,508 | 21.1 | 272,494 | 18.2 | 237,737 | 17.2 | 185,849 | 14.6 |
| 50 ~ 59세 | 583,964 | 33.0 | 447,256 | 29.8 | 348,067 | 25.2 | 302,852 | 23.8 |
| 60 ~ 69세 | 402,633 | 22.8 | 444,563 | 29.6 | 479,485 | 34.7 | 430,473 | 33.8 |
| 70세 이상 | 150,032 | 8.5 | 189,920 | 12.7 | 226,663 | 16.4 | 311,342 | 24.5 |

표 2-6.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예측

| 연 도 | 단위: 명 | | | | | | 합 계 |
|------|--------|--------|---------|---------|---------|---------|-----------|
| |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
| 2000 | 7,270 | 84,246 | 23,7737 | 348,067 | 479,485 | 226,663 | 1,383,468 |
| 2005 | 2,382 | 40,010 | 185,849 | 302,852 | 430,473 | 311,342 | 1,272,908 |
| 2010 | 1,140 | 22,140 | 125,560 | 261,550 | 428,070 | 279,880 | 1,118,350 |
| 2015 | 530 | 8,390 | 58,890 | 207,400 | 367,780 | 239,990 | 882,980 |

주: 총량은 KREI-ASMO에 의한 분석 결과, 연령별 분포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분석 결과의 비율을 적용함.

2.2. 영농승계자의 실태와 전망

- 영농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 1995년 13.1%, 2000년 11.0%, 2005년 3.5%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농가의 경영 승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

| 연령별 전 체 | 1990 | | 1995 | | 2000 | | 2005 | |
|----------------|-----------|------|-----------|------|-----------|------|-----------|------|
|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호수 | 비율 |
| 영농승계자 없는 가구 | 1,477,513 | 83.6 | 1,304,315 | 86.9 | 1,233,015 | 89.1 | 1,227,745 | 96.5 |
| 영농승계자 있는 가구 | 289,520 | 16.4 | 197,161 | 13.1 | 151,503 | 11.0 | 45,163 | 3.5 |
| 15 ~ 19세 | 67,389 | 3.8 | 25,348 | 1.7 | 16,237 | 1.2 | 2,612 | 0.2 |
| 20 ~ 29세 | 158,276 | 9.0 | 85,237 | 5.7 | 54,386 | 3.9 | 12,385 | 1.0 |
| 30세 이상 | 63,855 | 3.6 | 86,576 | 5.8 | 80,880 | 5.9 | 30,166 | 2.4 |

3. 농어촌 뉴타운 조성정책

3.1. 농어촌 뉴타운 정책의 배경

- 농가는 사회적 단위 및 농업경영의 단위이며, 경제주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와 건실한 가족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하지만 농어업이 고령화된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승계인력의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 농가인구 및 경영주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후계자 보유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영승계의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지역의 과소화 유발에 따른 폐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구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가구의 소

비, 복지등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농산업의 지속성과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 특히,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화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령농가에 의존한 전통적인 농업생산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농산업이 추구하는 신지식기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 재촌농가의 농업인력 재생산 기반이 붕괴된 현상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하여 농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 쌓았고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귀농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도 귀농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농어촌 이주 도시민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농촌생활에 따른 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등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했다.

3.2. 농촌과 마을 및 커뮤니티 개념

3.2.1. 농촌 및 마을

- 농촌의 기능적 가치나 사회 및 공간적 위치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상이하므로 농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렵다<김태연, 2007>.
 - 도시는 2차, 3차 산업활동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반면 농촌은 주로 1차 산업인 농업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전통적으로 농촌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농업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 행정적으로 농촌은 면부 지역을 지칭하고 이를 구성하는 리단위를 기본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마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자연·생태적,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 지역사회로 이해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농업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3.2.2. 커뮤니티

- 커뮤니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행정학, 사회복지측면과 건축, 지역개발 측면, 경제학 측면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 김기현(2003)에서 커뮤니티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가 형성된 생활현장에 입각한 집단으로 규정하였고, 오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와는 달리 주민의 창의화 요구를 실현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 반면, 성우준(2005)은 커뮤니티를 사회집단의 특성을 갖고, 규모가 작지만 이들의 공통적 관심이 밀착되어 있는 하위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홍이식(2004)은 커뮤니티의 기능을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주민자치활동의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제1기능).
 - 산업과 경제의 발달에 따른 인간성 상실의 심화현상에 대한 인간성 회복은 커뮤니티의 제2기능이라고 한다.

- 지역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정보전달과 교류의 장을 커뮤니티의 제3기능이라고 한다.
 - 공동사회보호, 공동사회상호부조, 공동사회활동 등을 통한 협동생활의 장이 커뮤니티의 제4기능이라고 한다.
- 일정한 지역(영역)에서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를 통해 공통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 및 창출하는 유기체적 집단을 커뮤니티라고 말한다<김태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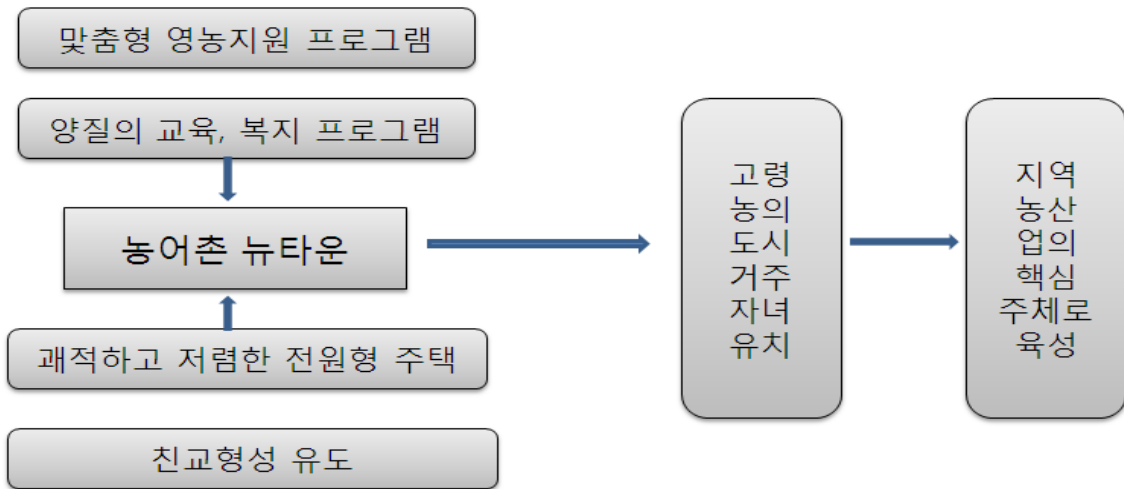
3.3. 농어촌 뉴타운

3.3.1. 농어촌 뉴타운 기본 구상

-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 농어촌 뉴타운 기본 개념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영농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제공,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사업시행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시와 군의 사업시행주체가 지역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적 단지 규모는 개소당 50~300세대 정도이다.
 - 또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은 농어촌정비법 제30조에 의거 시와 군이 직접시행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에서 기본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가능한 젊은 세대가 대상이다.
 -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조건 예외 적용), 지역 거주 30~40대 농어업인, 농수산물가공과 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 조건 예외) 등이 뉴타운 입주 대상자이다.
- 경영규모는 맞춤형 농정(2006. 12)의 기준에 따라 소득은 1,500~3,000만원 수준으로 성장 가능농 이상을 상정하고 있다.

그림 2-1. 농어촌 뉴타운 프로그램 체계



3.3.2. 농어촌 뉴타운 지원 프로그램

가. 맞춤형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 뉴타운 입주전 단계에서는 입주 대상자의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랩을 지원하며, 입주대상자의 수요를 감안한 농어업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뉴타운 입주후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창업후계 농어업인에 준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며, 농어업창업과 영농어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후견인제 및 창업농콜센터 등을 지원한다.
- 뉴타운 입주후 성장단계에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 및 농지임차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CEO 과정을 지원하며, 각종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나. 교육과 복지 환경조성 및 전원형 주택 공급

- 출퇴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 및 유치원 우선 배치와 농어촌 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 초, 중, 고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농어촌 뉴타운 인근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강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인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를 지원하고, 뉴타운의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하여 저층형(단층, 복층)으로 건축된다.
 - 입주 주택은 수요를 고려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기반시설조성비 보조, 임대주택 건축비 보조 및 장기저리융자 등을 통해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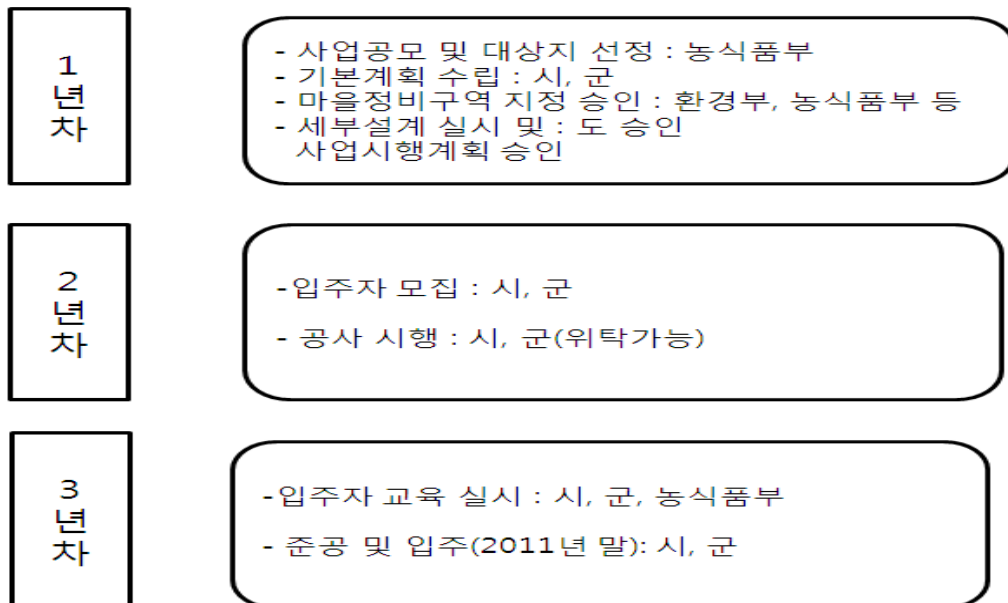
다. 뉴타운 시범사업 개요

- 2009년 시범사업 희망 시와 군의 공모를 통해 5개소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기간은 2009~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1차년도(2009년)는 부지확보,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2차년도는 기반시설조성, 주택건축 추진, 3차년도는 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사업부지는 지자체가 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비는 국고 70%, 지방비 30%씩 부담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보조 40%, 농특용자 60%를 지원하고,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농특용자 100%를 지원한다.

라.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체계

- 뉴타운 사업시행주체는 관련부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주거단지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39조에 따라 추진한다.

그림 2-2.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체계



3.3.3. 농어촌 뉴타운 의의

- 종전의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한 쾌적한 정주환경까지를 고려한 종합지원방식으로서 처음 시도되는 귀농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 “농어촌뉴타운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공모를 토대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 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공급
 -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유도 프로그램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농어촌뉴타운”이 낙후된 주변지역의 고령농업인과 융화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선진적인 지역만들기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주택, 생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의 각종혜택이 집중될 경우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기존마을과 격리된 독립형 주택단지는 기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3.4.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현황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공모한 지자체는 14개(2009년 12월)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개, 충청북도 1개, 전라북도 3개, 전라남도 6개, 경상북도 2개, 경상남도 1개 지자체가 지원하였다.

- 14개 지자체중 뉴타운의 규모별로 300호, 200호, 150호, 100호, 50호 등이 있으며,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 등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 현재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제안서에 제시된 연계지원 프로그램에는 자금지원, 교육지원, 의료 및 복지지원, 농가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뉴타운에 정착한 주민과 기존 지역주민과의 친교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심도있게 다루지지 않고 있다.
 - 지자체별 제안서에 있는 연계지원 프로그램중 친교형성지원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활동 모임, 바자회, 이웃사촌맺기, 뉴타운 동아리활동, 뉴타운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등이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귀농 현황과 정책

1. 귀농 현황과 애로사항

1.1. 귀농 실태

- 1990년에서 최근 2007년까지 연도별 귀농 가구수는 28,081가구에 이른다. 가장 많은 귀농 가구가 유입된 때는 1998년과 1999년으로 평소의 10배 가 가까운 인력이 유입되었으며, 1990년에서 1999년까지 귀농 가구수는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귀농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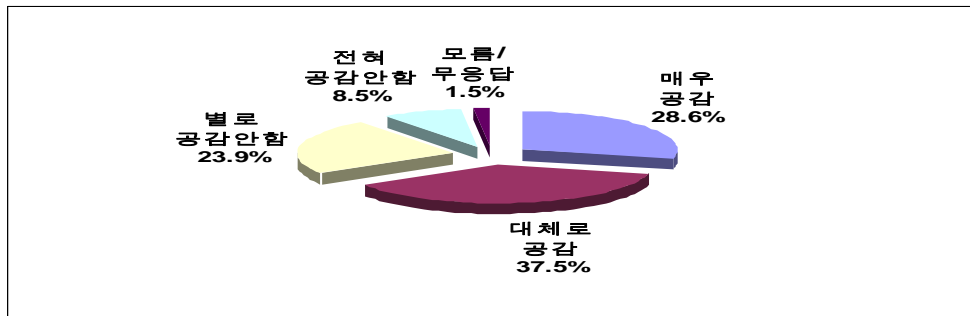
표 3-1. 연도별 귀농 현황

| 구분 | 합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 가구수 | 28,081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 누계 | 28,081 | 18,867 | 19,747 | 20,516 | 21,401 | 22,703 | 23,943 | 25,697 | 28,081 |
| 구성비 (%) | 100 | 4.1 | 3.1 | 2.7 | 3.2 | 4.6 | 4.4 | 6.3 | 8.5 |

1.2. 귀농에 대한 인식 및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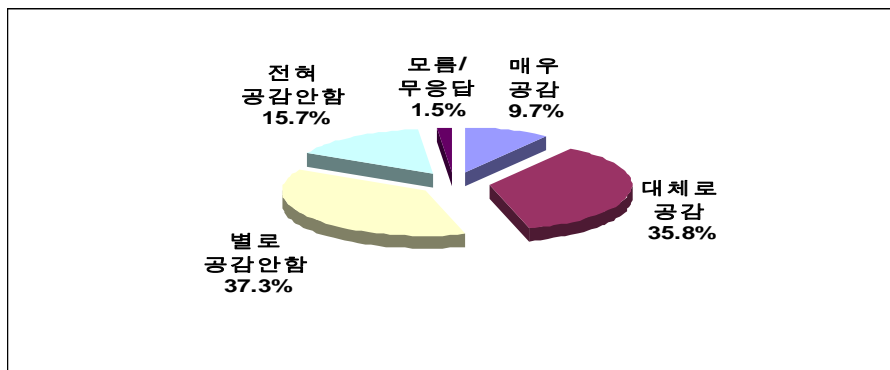
- ‘농촌생활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에서의 생활이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에 매우 공감이 28.6%, 대체로 공감이 37.5%로 긍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전원 농촌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농촌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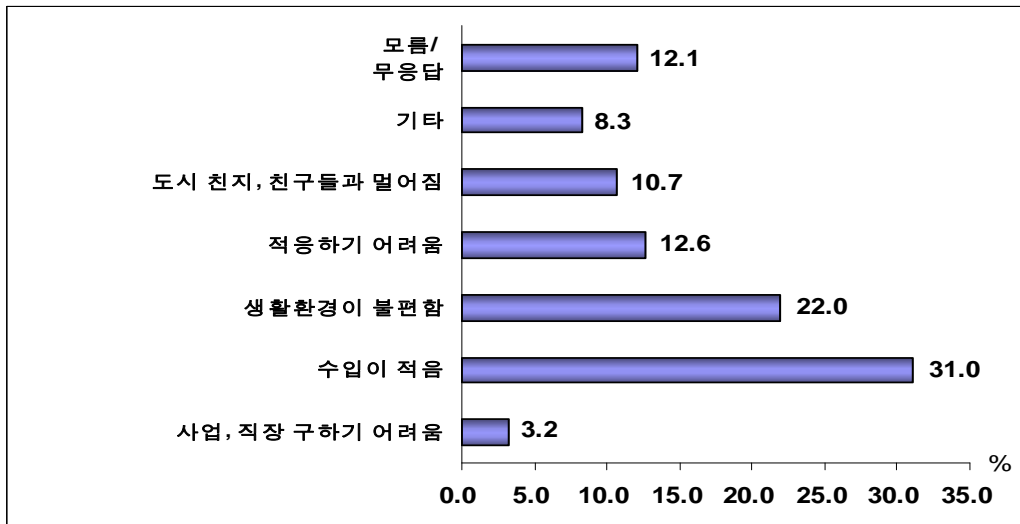
- 그러나 농촌생활 편의성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향후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물음에 공감한다 (45.5%)는 의견보다는 공감하지 않는다(53.0%)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 3-2. 농촌생활 편의성에 대한 불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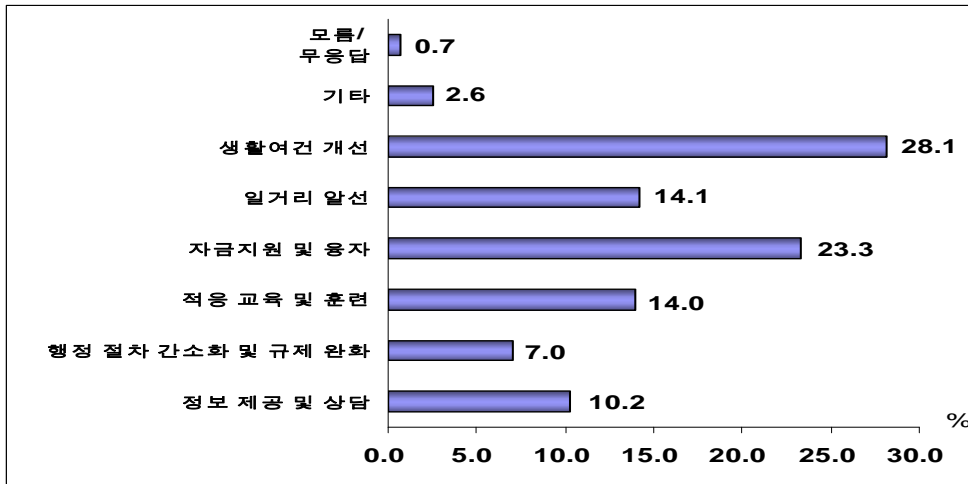
- 농어촌 이주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낮은 소득이다.
 - 농어촌 이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었던 점'으로는 경제적 소득이 31.0%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22.0%, 농촌생활 적응 불안이 12.7%로 나타난다.

그림 3-3. 농어촌 이주의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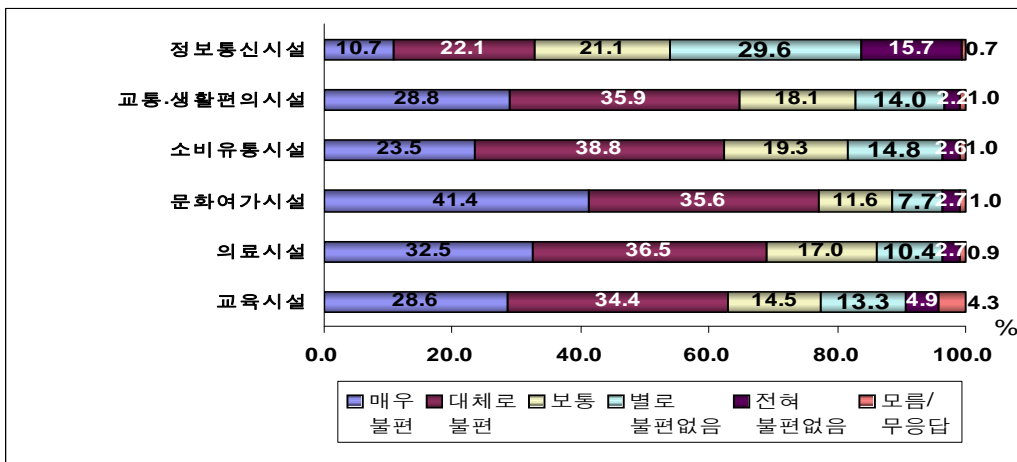
- 농어촌 이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생활환경여건 개선이다.
 - '농어촌 이주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여건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28.1%).
 - 그다음으로 자금지원 및 용자가 23.3%, 일자리 알선이 14.1%이다.

그림 3-4. 농어촌 이주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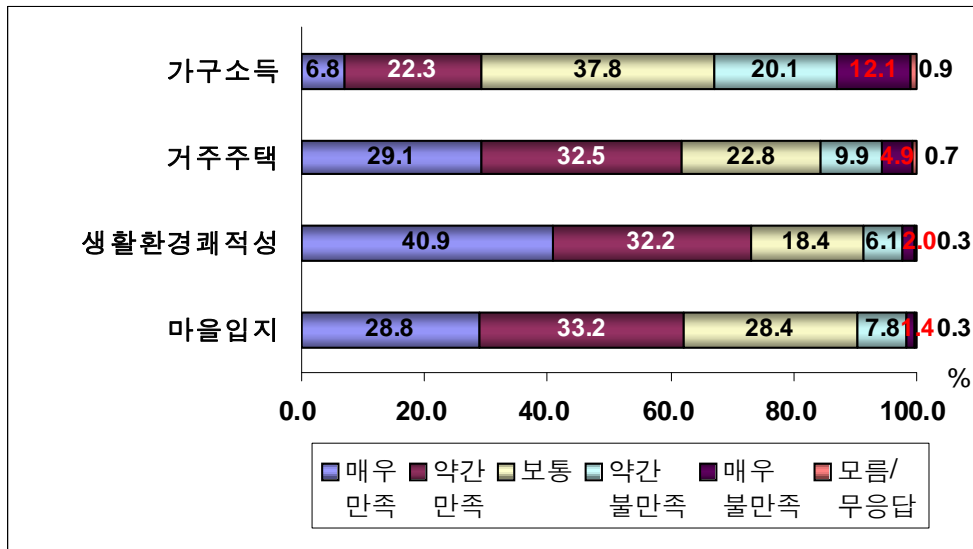
- 현 거주지의 생활환경여건 중 문화여가시설이 가장 불편하다.
- ‘현 거주지역의 생활 여건 중 불편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문화여가시설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의료시설,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로 나타난다.
- 반면, 정보통신시설은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림 3-5. 농어촌 거주지역 생활여건 농촌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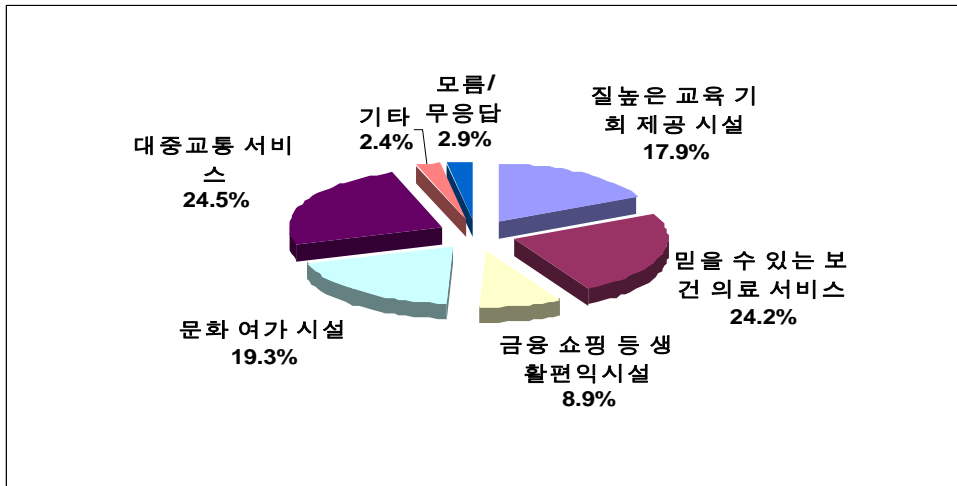
- 농어촌 생활 중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이 낮았다.
 - ‘농어촌 생활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생활환경쾌적성에 대한 만족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을입지가 62.1%, 거주주택이 6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 반면,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은 29.1%에 불과하다.

그림 3-6. 농어촌 생활 만족도



- 가장 시급한 인근 중소도시 서비스 확충시설로는 교통과 의료시설이다.
 - ‘현 거주지역의 “인근 중소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될 사항’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24.5%, 믿을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24.2%로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문화여가시설 19.3%, 질높은 교육기회 제공 시설이 17.9%로 나타났다.

그림 3-7. 거주지역의 제공 서비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될 사항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주여건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¹ 농산어촌 주민들은 문화·여가 시설, 교육 서비스, 복지, 보건의료 등에 대해 도시 주민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다는 답변을 많이 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4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특히 뒤떨어지는 정주여건으로서 무엇보다 소득원 및 취업기회 부족과 열악한 교육 환경, 의료 여건, 문화·복지시설 등을 들고 있다(이동필 외, 2004).
- 특히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입장에서 볼 때 주택·도로·상하수도 등의 기초 생활환경여건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는 점은 농어촌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이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절대적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에 큰 제약점이 될 수 있다.

¹ 송미령 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2006의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요약 발췌하였음.

○ 보건의료 여건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 접근성 면에서 농어촌이 열악한 상태이다.
- 질병 치료시 겪는 애로 사항으로도 농산어촌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멀다”는 응답이 도시민에 비해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취약한 교육 여건

- 농어촌의 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2005년 기준으로 폐교도 2,996개에 이르고 있다.
- 그 결과 통학 거리가 멀어져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 도보 통학하는 비율이 40.7%로 도시 학생(50.2%)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반면 자가용 통학 비율이 7.3%로 도시의 1.8%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4).
- 이처럼 교육 여건이 열악한 탓에 가구원 중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농산어촌은 12.9%로 도시(6.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4).² 이는 농어촌 교육 기반이 더욱 열악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농산어촌 주민들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11.9%에 머물렀고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34.5%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주민의 경우 29.5%가 만족하고 20.1%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농림부, 2004).

○ 문화·여가시설

² 농림부(2004)와 유사한 조사로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2004 농촌생활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촌 취학 자녀를 둔 농촌 가구 비율이 24.9%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농림부가 자녀들의 경우 도보 통학 비율도 30.9%로서 농림부 조사 결과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간에 응답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문화·여가시설에 대해 55.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고 있어 31.9%가 그와 같이 답한 도시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농림부, 2004).
 - 농어촌의 문화시설 자체가 열악할뿐더러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66.1%에 달한다. 교통 불편, 시간 부족, 정보 부재, 프로그램 미비 등이 주된 이유로 드러난다(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기초 생활환경 여건
- 주택,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환경 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주민들이 만족도는 낮고 불만족도는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농림부, 2004). 그러나 이러한 생활환경 면에서의 도농간 차이는 교육이나 보건의료, 문화 등에 비하면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리라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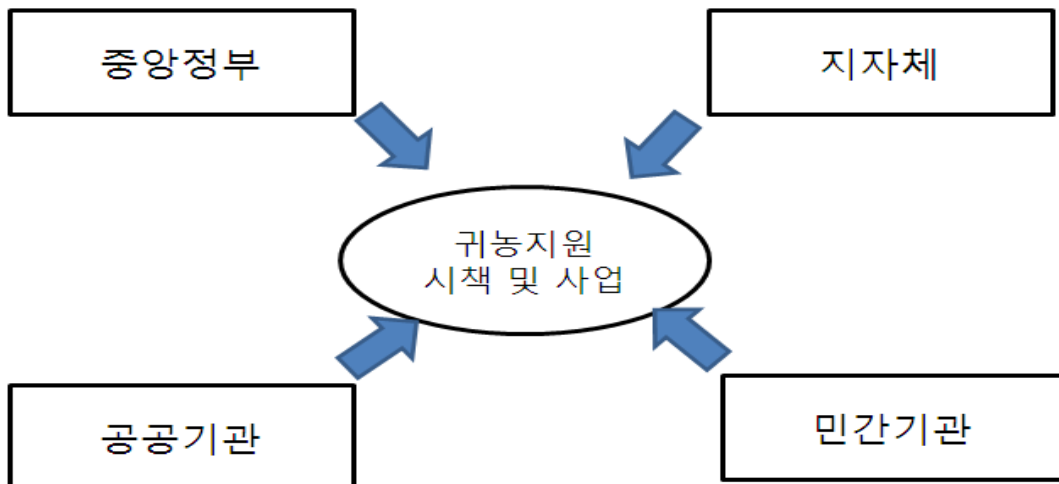
2. 귀농 정책의 동향

2.1. 귀농정책 추진 주체

- 귀농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영인력과의 도농교류과 등에서 귀농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인턴제,

- 창업농후견인제 및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전통테마마을사업,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을 운영하여 각종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민간기관인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에서는 귀농 관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생태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귀농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귀농통문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3-8. 귀농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주체



2.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사업

2.2.1. 중앙정부의 마을 지원사업과 정책

가. 마을지원사업

1) 전원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의 공간 정비에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 사업으로는 농림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에서 관장하는 10여개의 사업이 있으나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유일하다<송미령 외, 2006>.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전신에 해당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주민에게 문화마을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주민은 물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30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 융자지원(3%)하고 있다.

2) 녹색농촌체험마을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또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3)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 증진,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역 여건과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방비 등의 차등지원이 가능하다.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사회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다.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지역 주민의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권역으로 정의한다.

표 3-2. 마을단위 지원사업

| 구분 | 사업내용 | 근거법령 | 주관부서 |
|------------|---|-----------------|------|
|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 시설 기타 관련 사업 | 농업농촌기본법 삶의질법 | 농식품부 |
| 농촌전통테마마을 | 마을 고유 테마 발굴 마을환경 정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 농촌진흥법 삶의질법 | 농진청 |
| 산촌생태마을조성 |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마을운영 | 산림기본법 | 산림청 |
| 전원마을조성사업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부대시설 설치 운영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정비법 | 농식품부 |
| 정보화마을조성사업 | 정보이용환경 조성지원 홈페이지 및 콘텐츠 구축 등 | 정보격차해소법 | 행안부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 등 | 삶의질법 | 농식품부 |

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은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추진방향은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타 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 및 여성에 대한 농촌정착을 유도한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 신규인력 유입 대책으로 농업인턴제, 농과대학영농정착과정, 농고현장체험지원, 신규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창업농후견인제, 직업훈련과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 신규인력 유입 정책

| 사업명 | 사업목적 | 지원대상 | 지원조건 및 방식 |
|------------------------|--------------------------------|-----------------------------|--|
| 농고현장체험지원 | 영농체험 기회제공으로 젊은 예비농업인력 양성 | 10개 농고 | 현장실습 체험비 지원 (국고 100%) |
| 농업인턴제 | 영농실무 연수지원으로 영농정착 유도 | 18~44세 미취업자 | 선도농가에 인턴1인당 월60만원 지원(국고70%, 지방비30%) |
| 대학생창업 연수제 | 영농정착 희망 대학생에게 창업연수 지원 | 농과대 3~4 학년 (1년간) | 연수기관에 연수비용 지원(국고 100%) |
| 농과대영농정착교육 과정(Track) | 농과대의 후계인력 양성기능 지원 | 농과대 2학년 (3년간) | 교육운영에 필요한 현장실습비 등 지원(국고100%) |
| 직업훈련과정 | 비농업계 잠재인력의 영농정착 지원 | 만45세 이하 (영농기반이 있는자) |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지원(국고100%) |
| 창업농후계농업인 지원사업 | 젊은 전문농업인력확보 | 만35세 미만자 | 영농시설자금 2천만~2억원 지원(연리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신규후계농업인지원사업 | 미래농업인력확보 | 만45세 미만자 | 영농시설자금 2천만~5천만원 지원(연리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창업농후견인제 | 창업농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 | 창업농으로 선정된지 5년 미만인 자 | 후견인에게 월 50만원 지원(국고70%, 지방비30%) |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 후계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지원 | 후계농으로 선정된 지 5년이상된 농업인 | 시설·개보수자금 8천만원지원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

다. 농업인 교육 및 훈련

-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시장을 보는 안목을 갖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품목별·경영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배워서 돈되는 교육실현을 목표로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였다(2006).
 -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주도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전환
 -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의 농업인교육 참여 확대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화교육 추진
 - 대학·농협 등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교육정보 공유 및 농업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인프라 구축
- 농업인에서 소비자·귀농 희망자 등으로 농업교육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라. 도시민유치프로그램

-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일시적 체재를 유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농촌 정주인구 유치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이 있다.
 -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2005년)은 농촌 정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이 선호할만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 정주인구의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 및 사업대상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조율하는 제도적 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시행 초기에는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담양, 의령, 제천, 상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생활공간 모델조성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러 부처 사업의 패키지화

를 통해 마을 규모의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모델이 되었다.

- 또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에서도 도시민 농촌유치를 테마로 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 하드웨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민 정주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도농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07~’09)”이 기획되었다.

2.2.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모든 시·군이 지역개발 및 인구감소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며, 특별히 일반 도시민의 이주 촉진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알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지원(전남)
 - 도 농업기술원에 귀농강좌 개설 및 귀농자 중 50명을 선정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시 1인당 월 30만원 지원(전남)
 - 빈집 알선(태안, 고창, 곡성, 의령 등) 및 빈집 정착시 수선비 지원(전남 250만 원, 영광 40만 원, 상주시 동당 500만 원, 하동 1천만 원 이내)
 - 귀농어가에 정착자금 융자(전남 65세 이하에 5천만 원 내 융자) 및 정책자금 이차보전(상주시)
 -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

아 육아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경북 예천군은 35세 이상의 농촌 노총각을 대상으로 맞선 주선은 물론 결혼·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은 출산장려용품 지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농촌인구 유입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농협충북 지역본부와 업무 제휴를 맺고 군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을 무료로 들어주고 있다.

- 기업체 임직원과 대학생 전입에 대해 기업과 학생회에 규모별로 장려금 지급(예산군: 50만~500만 원) 또는 차량등록비 및 장학금 지원(홍성군)
 - 기타 전입자의 새로운 마을 조성에 지자체가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비 보조(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전북 장수군 하늘소마을 등)
- 시·군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당 지역에 도시민 정주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한 사례도 있다. 앞의 전원주택 조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담양군·예천군·장수군·남해군·인제군·북제주군 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들 사례는 일반 도시민이 아니라 특정 직업·신분·목적 가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2.3.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의 관련 사업

-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는 무엇보다 민간기구의 활동과 주택업체의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민간기구의 활동: 한국농촌공사의 도농교류센터, 농협의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불교 귀농학교 및 실상사 귀농학교의 귀농교육 등
 - 주택업체의 펜션·전원주택 분양사업

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의 사업

- 한국농촌공사의 도농복합추진단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2년 7월 18일 농림부는 2002년 6월 10일 발표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대책(안)'의 추진기구로서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
 - 2003년 1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에 이관
 - 2004년 2월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센터'로 개편
 - 2004년 3월 3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 2006년 1월 '도농교류센터'를 '도농복합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 '도농복합추진단'의 사업: '도농교류센터'의 확대 개편과 함께 이전의 농산어촌 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와 도농교류 사업에 농촌주택·전원마을·은퇴농장의 조성 등 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이 추가되었다.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도농생활체험 캠프 운영, 주말 농촌주택 갖기 운동, 도시자본 유치 설명회, 초등학교 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험가입,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지원,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도농교류센터 운영 등
 - '농어촌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농지은행·귀농귀촌·그린투어·주택정보·지역투자정보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로는 농어촌체험형·주말전원생활형·취업형·노후생활형 등 유형별 귀농 마을과 농지·주택 구입 절차 및 요령, 지원정책, 교육기관과 경험담 등을 제공한다. 주택정보로는 집짓기정보·도우미·설계도·지원정책·업체·매물 정보 등이 제공된다. 지역투자정보에서는 추자사업·분양·지원·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와 농림

부의 농촌개발사업, 투자컨설팅, 성공사례 등이 소개된다.

- 중장기 농어촌 지역개발 인력 육성사업: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 개발 리더십육성 과정, 동기화 과정, 사업주제별 과정 등의 운영 및 농어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 등
 - 복합생활공간 조성 사업: 농촌주택 개발 관련 기본조사와 농촌주택 모델 개발 등, 농촌형 임대주택 관련 업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 도농복합추진단은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한국농촌공사의 내부 조직으로서 인력과 자금의 지원을 받아 농림부의 관련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한편 농촌관광·도농교류·농어촌정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농교류·농어촌 정주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출현하기 전까지 과도적인 기구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관광·도농교류·농어촌 정주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그치고 최초 접촉에서 실천까지 일괄 안내하는 체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교육

- 1996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본부’로 출발한 순수 민간기구로서, 생태적 공동체마을 건설과 유기순환적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일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1996년 7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한국 4-H연맹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여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준비 소위원회 개최한 데 이어 9월에 창립총회 개최
 - 1997~2000년에 매년 3-4기의 귀농학교 개최
 - 2001년 귀농학교를 생태귀농학교로 변경하고 이후 매년 4기씩 개최
- 주요 사업: 귀농교육,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귀농자 네트워크 운영,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실습장 운영 등

- 귀농교육: 생태귀농학교(도시민 대상 귀농 교육), 도시농부학교(도시의 텃밭농사 지도교사 양성 과정), 주말농사학교(주말농장) 운영
 - 귀농정보 제공: 귀농복덕방(주택·농지 등의 매매·임대차 정보), 귀농 컨설팅(귀농자 대상 설문조사, 귀농준비자에 대한 자문 등), 귀농자료실(소식지 발간, 주제별 총서 발간 등) 운영 등
 - 귀농자 네트워크 운영: 분야별 귀농동호회(천연염색·약초·목공·퍼머컬처·생태건축 등) 운영, 연 1회 귀농인의 날 행사 개최 등
 -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실습장 운영: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홍보와 직거래, 지리산 귀농실습장 운영 등
- 운영자금 조달: 정부 위탁사업(귀농교육) 수입과 후원금, 자체사업 수익, 회비 등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
- 성과: 2005년 1년에 6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그 중 12%가 귀농하는 등 제1의 귀농인 양성 및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수료생들은 집단 혹은 개별로 귀농하며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 특히 친환경 생태농업 교육에 역점을 둬으로써 가치관이 뚜렷한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다.
 - 그러나 생태 순환농업의 교육에 편중하여 수료자들이 귀농 지역의 일반 농업인과 융화되지 못하거나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농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 불교 귀농학교 및 실상사 귀농학교

- 1998년부터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실상사가 주관하는 귀농학교로서, 도시에서 실시하는 불교 귀농학교, 이보다 더 심화된 교육을 위해 남원시 산내면

의 실상사에서 장기 합숙하며 교육하는 실상사 귀농학교가 있다.

- 실상사 귀농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동안 생명농사와 철학, 생태농업, 공동체, 여가활동, 자치살림, 현장실습 등의 교과과정을 통해 귀농예정자의 올바른 지침을 배우게 된다.
 - 귀농교육은 봄과 가을에 대략 2개월 간 이루어지며, 학기당 수강료는 76만 원이다.
 - 여기서도 환경농업 기술, 정신교육, 공동체적 가치관에 역점을 두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농외소득을 위해 식품가공·천연염색·팜스테이 등에 대한 교육도 있다.
 - 실상사 귀농학교의 귀농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생활 은퇴 후 전원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실버 귀농학교가 개설되어 있다.

- 귀농학교 수료자의 진로: 불교 귀농학교 수료생의 10%, 실상사 귀농학교 수료생의 60%가 귀농하는데, 정착 지역은 산내면이 많고, 귀농 후 3~5년은 농사수입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다.
 - 선호하는 귀농지역: 귀농 지역으로는 개발가능성이 없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곳, 농지가 있는 곳, 선배 귀농자들이 많은 곳 등을 선호하는데 (괴산·상주·장수·문경 등), 1998년 첫 수료자 배출 이후 지금까지 산내면에 100명 이상이 정착하였다.
 - 귀농 후 3~5년 기간에는 농사 수입이 없거나 적자이므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2.3. 외국의 농어촌 정주 관련 지원정책³

2.3.1. 일본의 도농교류

- 일본에서는 1965년경 지역개발의 대안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출현한 이후 1977년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도입되면서 도농교류 방식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와 마을가꾸기 사업이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 일본의 농업정책에서 중점은 오랫동안 신규 취농 및 귀농에 대한 지원에 두어져 왔는데, 1980년대 후반 들어 농촌에 이주하는 도시민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확실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 1987년 농업백서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 유형으로서 ① 도시통근형, ② 유기농업 등 농업전업형, ③ 예술가·기술자 등 자족적인 산업지속형, ④ 정년퇴직자의 노후여가형, ⑤ 주말 체재의 별장형 등 다양한 유형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농촌 측에서도 농산물 가공 기술자나 도농교류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영업 담당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도시측 인재를 받아들여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 도농교류 시책의 전개

- 1962년 전국총합개발계획(舊全總): 거점개발 방식의 지역진흥정책 실시
 - 1969년 제2차 전국총합개발계획(新全總):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방식

³ 송미령 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2006의 보고서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 ‘또 하나의 지역진흥책’ ‘대안운동’으로서 도농교류사업 등장
 - 1977년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3전총): 정주권 정비 방식 도입
 - 1987년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4전총): 교류에 의한 지역 활성화 본격화
 - 1998년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교류지역·참가주체 범위 확대
- 1992년 6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 그린투어리즘이 처음으로 정책에 등장하였다.
 - 1994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다.
 - 농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에 제공하기 위한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도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정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하는 것,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정비와 기능 충실

나. 도농교류사업의 추진체제

-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2년 9월 중앙정부의 내각관방차관과 7개 부처의 차관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부처 간의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2003년 6월 도농교류 홍보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 조직으로서 관련 민간기업·NPO(비영리조직)·공공단체·각종단체·개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추진회의(약칭 오라이! 닛폰=往來日本 회의)’를 설립하였다.
 - 구성 단체: 22개 도농교류 관련 공익법인
 - 활동 내용: 도시와 농산어촌 쌍방의 생활·문화를 향수하는 새로운 생

활 형태를 보급하는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운영에 의한 정보 제공 및 회원간 연락 강화, 전문부회에서의 도농교류 추진 방안 검토 및 제안, 지방 심포지엄 개최, 전국대회 개최 등

다. 일본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택지분양 유형별 사례

1. 텃밭 딸린 택지 분양: 야마구치현 무츠미촌(山口縣 むつみ村)
 - 사업개요: 텃밭·정원이 가능하도록 큰 필지로 택지 조성 후 분양(1995년 사업 개시)
 - 필지 및 단지 규모: 1필당 1,000㎡(300평)의 택지 13개 필지 조성
 - 분양 실적(2004년): 10필지(무츠미촌 주민 2건, 야마구치현 5건, 현 외 3건)
 - 분양가: 11,700엔/평
 - 분양조건: 촌에 거주·전입, 20-65세, 동거가족 보유, 분양 후 2년 내 주택 건축

2. 소규모 분산 택지 분양: 아이치현 아스케정(愛知縣 足助町)
 - 사업개시: 2002년
 - 사업개요: 기존마을에 적합하고 농업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2-5호 규모 분양
 - 필지 및 분양 규모: 1필지 100평 규모의 3개소에 7필지 조성
 - 분양 실적: 4필지 분양(그 중 2필지는 2004년부터 정주)

3. 토지 임대 후 무상 양도: 기후현 니유카와촌(岐阜縣 丹生川村)
 - 사업개시: 2000년(대부자 모집은 2002년부터)
 - 사업개요: 촌과 택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자가 18년간 임대료를 완납한 경우 택지를 무상 양도
 - 임대료: 계약과 동시에 매월 12,000-13,000엔
 - 제3자에 전매·전대 금지, 중도해약시 가옥철거 원칙(촌이 매수하면 감

정가의 2/3 기준)

- 임대 실적: 2002년부터 5필지 임대(그 중 4필지에 정주)
4. 휴경지 활용 차지권부 택지 분양: 와카야마현 나카츠촌(和歌山縣 中津村)
- 사업개요: 1991년 촌의 농가와 건설회사 등 약 20인이 ‘나카츠촌이주자추진 협의회’를 결성, 농가로부터 휴경지 임차, 이주자 모집한 다음 농지전용 대행 및 건축 후 임대
- 토지 및 주택 크기: 토지 약 180m²에 주택 50m²(건축비 980만 엔)
 - 임대료: 연 12만 엔과 보증금
 - 분양실적: 9년간 44세대 88인 이주
5. 제3섹터에 의한 택지조성·주택신축·매매: 교토부 미야마정(京都府 美山町)
- 사업개요: 1992년 제3섹터 ‘미야마고향(美山故郷)주식회사’ 설립, 부동산의 매매·임대차의 중개·관리, 택지 조성·분양, 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업무 개시
- 원칙: 정주가 절대조건(별장은 제외), 지역산 목재 이용, 분양호수는 기존 호수의 절반 이내로 기존 마을과 통합, 마을행사 참여 의무, 필지 크기 160-200평(텃밭 가능)
 - 사업 실적: 1992-2002년에 택지조성 31필지, 주택 신축 84건, 매매 130건, 빈집중개 31건 등을 통해 11년에 243명이 이주

2.3.3. 영국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Affordable Rural Housing)’ 정책

가. 개요

- 영국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도시부의 3배에 달할 만큼 역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증가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적정가격 농촌 주택 공급 시책(Affordable Rural Housing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 이 시책은 ‘주택 수요가 있으나 시장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카운티에서 적절한 토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화하고, 그곳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 요약할 수 있다.

나. 적정가격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주체

- 이 사업은 지방정부, 토지 소유자, 민간 투자자, 주택회사, 주택 관련 민간단체(예컨대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농촌청(Countryside Agency)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 사업의 추진에서 대부분의 카운티에 존재하는 ‘농촌 주택공급 활성화 담당자(Rural Housing Enabler)’는 독립적인 브로커(broker)로서 주택 공급의 모든 과정에 실무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택지 개발에 적합한 장소의 발굴
 - 농촌 지역계획 책임 부서와의 연락
 -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평가
 - 지역사회 및 기초 지방의회(parish council)와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지 유도

- 민간 투자자·주택업자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참여 제안
-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다. 시책의 추진 절차

1) 적절한 택지 선정(1단계)

- 공급하는 주택의 택지로는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 읍 지역(마켓타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을에서보다 더 큰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며, 농어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공급 장소와 일터 및 기타 시설 등으로부터 너무 멀어도 안 된다.
 - 대체로 기존의 주거지역 안 또는 그 인접지가 적지이다.
 - 택지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쉬운 곳이 좋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승용차 사용량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2) 지역계획 당국의 승인(2단계)

- 2004년에 제정된 ‘계획 및 의무 구매에 관한 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에 따라 ‘지방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에 근거해야 한다.

3) 주택 수요 판단(3단계)

- 지방정부가 적정가격 주택 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면 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수요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 수요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또는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Rural Community Council)’가 표준 조사표를 제공하며, 조사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가 수행한다. ‘농촌 주택공급 활성화 담당자’가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

이 공급될 적정가격 주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과 지역 사회는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지, 적정 임대료 수준과 모기지론 규모, 주택의 형태와 규모 등에 관해 조사한다.

4) 시책에 대한 농촌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4단계)

- 이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토지소유자나 개발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거센 저항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공급될 주택에 왜 그리고 누가 살게 될 것인지를 인식시켜줌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초 지방의회의 지지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5) 주택의 건축 및 공급(5단계)

- 4단계를 마친 후 주택의 건축 및 공급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option)이 있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적정 가격 주택의 택지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 4 장

귀농 정착사례 분석과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요구

1. 사례 조사 · 분석 개요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의 집단적 이주 촉진이라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참조할만한 전례가 많지 않은 정책 사업이다.
 - 귀농운동본부 등 NGO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귀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창업후계농 육성 정책 또한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지닌다.
 - 농촌지역에의 집단적 도시민 정착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지만, 농업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다.
- 있는 그대로를 참조할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유도되거나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된 국내외 몇 가지 귀농 · 귀촌 사례를 분석했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들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귀농가구 사례에 대한 면접조

사 자료, 귀농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개발 사례에 관한 2차 문헌 자료, 귀농자 정착과정의 단편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2차 문헌자료, 귀농·귀촌 관련 정책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헌 등을 분석했다.

표 4-1. 분석 대상 자료의 출처와 성격

| 구분 | 자료명 | 출처 | 자료 성격 |
|------|------------------------------------|-------------------|------------|
| 진안-1 | 진안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사례 | 김정섭·허주녕(2008) | 관찰·면접 조사보고 |
| | | 김정원·진명숙·박순영(2008) | 연구보고서 |
| 홍성-1 | 홍성군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공동체활동 사례 | 성주인(2008) | 관찰·면접 조사보고 |
| |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진안-2 | 진안군 새울터 전원마을 조성 사례 | 박문호·김정섭·허주녕(2008) | 면접 조사보고 |
| 남원 | 남원군 산내면 일대 귀농공동체 정착 과정과 지역사회 활동 사례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장수 | 장수군 하늘소 귀농자 마을 조성 사례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 | 성주인·김정섭·박경철(2006) | 관찰·면접 조사보고 |
| 괴산 | 괴산군 사기막 마을 사례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함양-1 | 함양군 청미래 마을 사례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산청 | 산청군 안솔기 마을 사례 |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 사례조사 보고서 |
| 함양-2 | 함양군 서하면 귀농가 사례 | 월간 '작은책' | 귀농자 수기 |
| | | 김정섭(2008) | 관찰·면접 조사보고 |
| 완주 | 완주군 귀농지원센터 사례 | 박문호(2008) | 관찰·면접 조사보고 |

2.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유형 분석

-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집은 없었으나 10개 사례 중 상당수에서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며 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귀농인들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가치관은 농촌 정착과정에서 환경농업 실천으로 실현되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 ‘지역사회에의 어울림’이라는 형태로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다수의 귀농자가 한 마을에 또는 한 읍이나 면에 정착한 ‘거점형 귀농 사례’인 ‘홍성’, ‘남원’ 등의 사례에서는 귀농인 집단이 농촌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 잡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표 4-2>. ‘함양-2’, ‘완주’의 사례는 ‘홍성’, ‘남원’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는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진안-1’의 사례는 귀농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단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되는 인적 자본임을 간파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 발굴 사례를 보여준다. 즉, 귀농자들이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귀농가의 겸업소득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결과인 것이다.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귀농자 집단의 형성이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지되어야 함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전업적인 농업활동만으로는 귀농자 가구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에서 겸업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연착륙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표 4-2. 귀농자 지역사회 참여 활동 유형별 분포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진안 1 | 홍성 | 진안 2 | 남원 | 장수 | 괴산 | 함양 1 | 산청 | 함양 2 | 완주 | 빈도 |
|--------------------------------|------|----|------|----|----|----|------|----|------|----|----|
| 마을단위 개발사업 실무(사무장, 간사, 이장) | ● | ○ | | | ○ | ○ | | ○ | | ○ | 6 |
| 도농교류 활동 (농산촌체험 프로그램, 산촌유학) | ● | ○ | ○ | ○ | ○ | | ○ | ○ | ○ | ○ | 9 |
| 지역사회 조사사업 | ● | | | | | | | | | | 1 |
| 귀농·귀촌 지원 활동 (예비귀농자 상담, 교육) | ● | ○ | | ○ | | ○ | ○ | | | ○ | 6 |
| 평생학습 지원 활동 (외국어, 취미, 교양 강좌) | ● | ◐ | | ○ | | | | | | | 3 |
| 지역사회 경관 관리 | ○ | | | | | | | ○ | | | 2 |
| 생활협동조합 | | ○ | | ○ | | | | | | ○ | 3 |
| 농업생산자 조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 ○ | ○ | ○ | ● | ○ | ○ | | | ○ | ○ | 8 |
| 농산물 가공품 생산 조직 (영농조합법인) | | | | ○ | | | | ○ | | ○ | 3 |
| 방과 후 아동 생활 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 ◐ | | ○ | | | | | | | 2 |
|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교육, 상담) | | ◐ | | | | | | | ◐ | | 2 |
| 여성농업인 상담 지원 | | ◐ | | ○ | | | | | | | 2 |
| 지역사회 도서관 운영 | | ◐ | | | | | | | | | 1 |
| 노인보건의료 지원 (노인수발, 밀반찬지원) | | ○ | | | | | | | | | 1 |
| 영유아 보육 | | ◐ | | ○ | | | | | ◐ | | 3 |
| 문화, 취미 동아리 | | ○ | | | | | | | | ○ | 2 |
| 교통약자(노인, 아동) 차량 운행 지원 | | | | ○ | | | | | | | 1 |

주1: '●'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자들을 명시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은 귀농자들을 명시적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귀농자들이 참여한 경우를, '○'은 공공부문 지원 없이 귀농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조직한 활동을 뜻함.

주2: 10개 사례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정착단계에 접어든 귀농자 집단들이 지역사회에서 영농활동 외에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앞의 분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몇 가지 제공한다.
 - 첫째, 도시에서 다양한 역량과 재능을 얻은 귀농인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본으로서 그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한 잠재력이 여성,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자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현실화된 사례들이 있으며, 진안군처럼 정책을 통해 그러한 잠재력의 현실화를 촉진한 곳도 있다.
 - 둘째, 사례들에서 현저하게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귀농자들의 활동 내용은 ‘도농교류’, ‘귀농·귀촌 지원활동’,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 ‘마을단위 개발사업 참여’ 등이었다.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는 귀농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귀농하기 전에 영위했던 도시적 생활의 경험과 귀농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귀농 이후에 도농교류나 귀농·귀촌 지원활동과 같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동기와 역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셋째, 마을 단위의 귀농자 공동체나 개별 귀농자 사례와는 달리 읍·면 내에 상당수의 귀농인들이 존재하는 거점형 귀농 사례들(진안-1, 홍성, 남원)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귀농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이 현저하다. 이는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속한 읍·면 수준 지역사회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3. 전문가 토론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구상의 접근방법과 원칙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개요는 <표 4-3>과 같다.

표 4-3. 전문가 토론 일정 요약

| 구분 | 일시 | 대상 | 주요 내용 |
|--------|--------|--|--|
| 전문가 자문 | 10. 6 | (사)농촌으로 가는 길 대표 성여경 |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진안군 새올터마을’ 사업 추진경험과 귀농운동본부에서의 귀농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기초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의 중요 고려사항 |
| | 10. 22 |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장 구자인 -농업기반계장 문병인 | • 농촌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의 중요 고려사항 |
| | 11. 2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 전문가 - 오내원, 박석두, 송미령 | • 연구 범위에 관한 자문 • 그 동안 수행한 조사의 방법, 연구 보고서의 논리적 구성에 관한 자문 • 관련 전문가 시각에서 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의 중요 고려사항 |
| 사례 조사 | 11. 17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자체 공무원, 귀농인 | • 상대적으로 귀농 인구가 많은 농촌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경험에 기초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의 중요 고려사항 |
| | 11. 18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자체 공무원, 귀농인 | |
| | | 경상북도 상주시 - 지자체 공무원, 귀농인 | •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에 기초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상의 중요 고려사항과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아이디어 |
| | 11. 21 | 경상남도 함양군 - 귀농인 | |

- 전문가 토론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과정의 단계별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야 한다.
 - 둘째, 사업추진 지역의 기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셋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경제활동, 지역사회 통합 등 다각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넷째, 귀농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주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주 후 적응 과정을 돕는 데에는 민간부문의 전문가 또는 NGO의 참여가 필요하다.
 - 다섯째, 귀농자들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체에는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농어촌뉴타운 공동체의 성공적인 지역 내 정착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4.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정책 프로그램 개발 요구

- 귀농은 개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기반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이므로 오랜 기간의 숙고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귀농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와 물적 지원이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입주 전’과 ‘입주 후’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단계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 입주 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 이주하려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보(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생활에 필요한 의료·교육 등 서비스 공급 실태)
 - 기초적인 영농 기술
 - 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관한 정보
 - 주택, 경관 등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입주 후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 적합한 품목 선정과 재배(또는 사육) 기술에 대한 심화된 교육(예: 지역 영농조직에서의 인턴 연수제도)
 -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농지, 농기계 등)
 -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 귀농가구의 겸업소득 기회(예: 지역사회 문화·복지·교육·평생학습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비농업 부문 취업 알선)
 - 기존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 지역사회 정착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수시적 상담과 조언(예: 귀농자 멘토링)

5.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요구

- 조성될 농어촌뉴타운의 입주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기존 주민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 양성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당초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보,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의 제반 생산요소들은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적인 사회적 연결망(network)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

가 많다.

- 농촌에는 아직도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복지 기능’을 통해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 귀농은 단지 경제활동 기반의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 전제하는 거주 인구 규모는 50~200호 규모이다. 이는 기존의 읍·면 중심지 마을 규모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규모이다. 농어촌뉴타운이 입지하는 읍이나 면 안에서 농촌 마을들간의 공간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지역사회 내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농어촌뉴타운의 거주 인구가 거의 대부분 신규 전입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사회 내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 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계기로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 주민들이 공동의 비전을 갖고 함께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기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 신규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주민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초기부터 그러한 편익 제공 가능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 전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이해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 기존 주민과 입주예정자 간 친교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와 주민 간 친교 프로그램(예: 만남의 날 행사 등)
- 기존 주민이 주도하는 입주자에 대한 지역이해 프로그램(예: 지역투어 및 상담 등)
- 농어촌뉴타운에 조성될 커뮤니티 공동시설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기존 주민과 주민의 협력적 설계 활동
- 기존 주민의 소득증대 기회 증진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권역에서 각종 소득개발 정책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와 기존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사업 지원 프로그램(예: 특화작물단지 조성, 공동농식품 가공·유통 법인 창립 지원 등)
- 기존 주민의 복지·문화·교육여건 개선 프로그램
 -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구 인근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관련 개발사업 연계 추진(예: 거점면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의 인적 역량을 활용한 ‘자치적 복지 프로그램’(예: 방과 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 재가노인 복지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1.3.3. 지자체 내 사업추진 조직의 구조와 기능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담당 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어촌뉴타운 조성에 따르는 하드웨어 정비(부지 확보 및 건축과 관련된 과업)
 - 지역사회 주민 및 지역 밖의 잠재적 입주자에 대한 홍보
 - 입주자의 입주 전·후 단계 소프트웨어적 지원(각종 상담, 교육, 자금지원 등과 관련된 과업)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정책사업에 대

한 검토와 조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외 민간부문 단체, 주민, 입주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농촌 시·군의 어느 한 실과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 사업 추진을 전담할 부서 또는 TF팀을 구성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체를 만든다(예: 진안군의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제 5 장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프로그램 구상

1. 프로그램 구상의 관점

-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개별 프로그램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구상한다.
 - 프로그램의 목적(왜)
 - 운용 주체와 대상(누가)
 - 주요 내용(무엇을)
 -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자원 동원 방법(어떻게)

- 가능한 경우, 수집한 2차자료나 현장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제시한다.⁴

⁴ 이하의 절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19개 중 농어촌뉴타운 준공 전후에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에 대해서 세부 프로그램 구상을 제시했다.

2. 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

- 다음과 같은 종류의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 프로그램 | 시기 | 참여 주체 | 공공부문 재정지원 소요 | 비고 |
|---------------------------------|------------------|-------|----------|--------------------|---------|
| 일반적 정보 공유 및 지역 이해 프로그램 | 농업·농촌 현실 이해 강좌 | 입주 전 | 귀농인 | ○ | |
| | 농어촌뉴타운 사업 설명회 | 입주 전 | 공동 | ○ | |
| | 지역체제 중장기 귀농 체험 | 입주 전 | 귀농인 | ● | |
| | 입주(예정)자-주민 만남의 날 | 입주 전후 | 공동 | ○ | |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 정주환경 사전 답사 | 입주 전 | 귀농인 | ○ | |
| | 커뮤니티 시설 공동 구상 | 입주 전 | 공동 | ● | |
| | 농어촌뉴타운 지역 발전계획 | 입주 후 | 공동 | ● | |
| | 멘토링 | 입주 후 | 공동 | ○ | |
| 영농교육 프로그램 | 기초 영농교육 | 입주 전후 | 귀농인 | ● | |
| | 영농법인 및 선도농가 인턴연수 | 입주 후 | 공동 | ● | |
| | 창업농 보육과정 | 입주 후 | 귀농인 | ● | |
|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자치적 복지 프로그램 | 지역 아동지원센터 운영 | 입주 후 | 공동 | ● | 사회적 일자리 |
| | 재가노인 지원 활동 | 입주 후 | 공동 | ● | 사회적 일자리 |
|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입주 후 | 공동 | ● | 사회적 일자리 |
| | 도농교류 활동 | 입주 후 | 공동 | ○ | |
| |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 입주 후 | 공동 | ● | 사회적 일자리 |
| 경제활동 프로그램 | 겸업소득 취업 알선 | 입주 후 | 지자체 | ○ | |
| | 사회적 일자리 공모 | 입주 후 | 공동 | ● | 사회적 일자리 |
| | 농식품 가공·유통회사 | 입주 후 | 공동 | ● | |

주1) 공공부문 재정지원 소요란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은 ‘중간 수준’을, ○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뜻함.

주2) 비고의 ‘사회적 일자리’ 표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농어촌뉴타운 주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겸업소득활동도 겸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음을 뜻함.

3. 세부 프로그램 구상

3.1. 일반적 정보 공유 및 지역 이해 프로그램

3.1.1. 농업·농촌의 현실 이해 강좌

목적

- 잠재적 농어촌뉴타운 입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농어촌뉴타운에 이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운영 주체와 대상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부서 또는 사업추진기구가 주관하여 ‘농어촌뉴타운 수요 조사’에 응했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의, 질의응답, 토론 등의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석 대상자의 범위와 수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갖는 의의와 현실
- 일상생활 측면에서 본 농촌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

- 지역사회에 정착한 귀농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농촌 생활’
 - 자녀 교육 여건
 - 농업 외 경제활동
 -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
 - 의료, 문화여가 등의 기초 생활 서비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해 도시민의 시각에 맞추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귀농자와 전문가를 발표자를 참여시킨다.
- 다수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3.1.2.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

□ 목적

- 농어촌뉴타운 조성 정책의 취지를 설명한다. 잠재적 입주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입주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충분히 알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다.

□ 운영 주체와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부서 또는 사업추진기구가 주관한다. 잠재적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와 기존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각각 나누어 진행한다. 특히, 농어촌뉴타운이 입지할 장소가 속한 읍 또는 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농어촌뉴타운 조성 정책의 취지와 의의
- 지역에 조성할 농어촌뉴타운의 규모와 내용
 - 입지, 입주자 수, 농업 생산·가공·유통 부문 여건, 교육·의료·문화여가 서비스 공급 실태
- 농어촌뉴타운 조성으로 인해 변화될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모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다수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3.1.3. 농촌지역 체재 귀농 체험

□ 목적

-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과 농어촌 정주의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가 있다. 농업·농촌을 체험하는 것이 농어촌뉴타운 입주를 계획하는 희망자들의 이주의향을 형성하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시간을 내어 직접 영농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써 기초적인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이주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 운영 주체와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부서 또는 사업추진기구가 주관한다.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의 기존 귀농가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 주민, 지역 농협, 영농조합법인, 주말농장 경영자 등이 협력한다. 이들 주체들이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참여한다.

□ 주요 내용

- 도농교류활동을 수행하는 마을 활용
농촌관광 사업을 하고 있거나 도농교류 활동이 활발한 지역 내 마을에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방문하여 영농활동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길게는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체재하면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영농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입주 희망자들이 체재할 숙박 시설로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

일본 지자체들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사례

-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의 정주체험 지원사업(www.city.ichnoseki.iwate.jp)
 - 시의 한 마을을 지정하여 농가, 마을회관, 공동숙박시설, 빈집 등에서 체재하며 농가, 농장, 농협 등의 작업장, 자연체험의 장 등을 활용해 개인, 친구나 지인 그룹, 가족 단위 등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으로 체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교통비와 숙박비만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체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농가나 농장 등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음. 숙박비의 경우 농가 및 마을회관은 3,500엔(한화로 3만원 수준)이며 시에서 직영하는 숙박시설은 더욱 저렴함.
 - 체험 가능한 항목은 농작업 체험, 생산현장 견학, 농가숙박 및 농가생활 체험, 낚시나 등산, 버섯따기 등이 가능함.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의 연령별 귀농 지원사업(www.hiroins-net.net/jp/hiroagri/)
 - 18세-40세는 히로시마활력농업경영자육성이란 명분으로 히로시마시 거주를 조건으로 시설채소 재배, 경영실습 등의 일체 비용을 2년간 시가 부담하고 농지의 알선(연수농지의 대여), 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농협으로부터 임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함.
 - 40세 이상의 경우는 슬로우 라이프로 꿈만들기라는 명분으로 노지 채소와 화훼 재배를 위한 1년간의 연수후 농지를 알선해 줌.
 -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내고장 귀농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년간의 연수를 거친후 히로시마 시내에서 채소와 화훼의 판매가 가능토록 함. 이 경우 비용은 보험료 및 교과서대금 등에 한정하며 연수는 월 1-2회 정도에 강의와 실습을 진행

자료: 송미령·김정섭(2008)

농촌의 빈집 리모델링을 귀농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진안군 사례

- - 진안군은 200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도시민들을 초청하여 일주일 간 주택 유지보수 전문가와 함께 실습을 동반한 농촌주택 리모델링 체험을 실시했다. 실습 수단이 되는 주택은 빈집으로 남겨진 것을, 해당 마을 주민들이 임차하여 교육 프로그램 장소로 제공한 것이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임차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향후 농촌 이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이나 도농 교류 활동을 계기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게 할 계획이다.
-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빈집 목록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도시민 유치활동을 전개한 진안군의 사례는 향후에도 적합한 방식으로 모델화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세부사업 유형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송미령 · 김정섭(2008)

○ 체재형 주말농장을 활용한 귀농 체험 프로그램

농촌관광마을, 개인, 또는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일정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이곳에서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모델에 따라 경기도는 ‘클라인가르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임대분양한다. 임대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설정한다.

일본 나가노현의 1년 단위 임대형 주택 분양 사례

- 나가노현은 도시민의 농촌 체재 및 정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단위 임대형 주택을 조성, 분양한 바 있다. 도시민의 호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 총 규모는 약 8천 평 정도
 - 49구획, 1구획당 평균면적 150㎡, 건물면적 50㎡, 나머지는 텃밭
 - 연간 360,000엔(수도광열비는 별도)
 -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의 계약



자료: 송미령·김정섭(2008)

○ 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한 ‘농촌 오너제’⁵

‘농촌 오너제’란 다양한 농산물 등 농어촌에서 나는 상품의 생산과정에 도시민이 간헐적으로 참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쌀, 과수작물, 경주마, 애완동물 등 다양한 오너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를 분할하여 도시민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심

5 농촌 오너제에 관한 내용은 임경수 등(2006)의 연구 결과를 발췌, 요약한 것임.

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겸하여 텃밭가꾸기, 펜션 및 주말농장 이용, 농촌 체험행사, 농산물 장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영농체험을 수행할 농지와 체류할 숙박시설(리모델링한 빈집, 농가민박 등)을 지역의 도농교류 마을 또는 기구와 협력하여 확보한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영농체험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촌 마을의 참여가 필요하다.

3.1.4. 입주 예정자와 지역주민 ‘만남의 날’과 ‘동아리 활동’

□ 목적

- 잠재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라 할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가꾸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이주하려는 지역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착을 갖게 한다.

□ 주요 내용

- 여러 귀농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반적 의미의 정보 외에도 사업 추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가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회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또는 농어촌 뉴타운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정보와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동아리’ 또는 ‘클럽’을 조직하여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⁶.

-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명시된 지역의 도농교류센터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지역의 환경단체, 농업인 단체, 마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일회성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지자체의 경상비 지원이 필요하다.
- 귀농체험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경상비 지원보다는 사업추진비를 지원하여 자발적 주민참여의 원리를 따르는 조직을 구성하게 한다. 이 활동을 통해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 전에 이미 지역정서를 이해하고,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할 수 있다.

3.2.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3.2.1. 정주환경 사전 답사

목적

⁶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임경수 등(2006)이 제안한 ‘지역별 귀촌클럽 조직 그린프렌드’ 사업의 내용에 기초한 것임.

- 예비 입주자들이 농어촌뉴타운이 조성될 지역의 생활환경을 미리 알고 지역 주민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농어촌뉴타운으로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농어촌뉴타운으로의 입주 전에 지역 주민들이 예비 입주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지역을 함께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비 입주자들에게 안내를 할 만한 주요 답사 코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농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직, 기관, 단체
 -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군청 농정담당 부서
 -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주요 생산자 단체
 - 지역의 주요 농식품 가공·유통 업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
 - 읍·면 중심지 시가(상점, 금융기관, 기초의료시설 등)
 - 학교
 - 주변 마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교통수단과 답사 코스를 안내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3.2.2. 커뮤니티 시설 공동 구상

□ 목적

- 농어촌뉴타운에 설치될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들과 기존 주민이 함께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갖출 것인지를 예비 입주자와 주민들이 함께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계기이자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의 계기가 되게 한다.

□ 주요 내용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가 확정되면 입주자와 기존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설계·시공업체 담당자 등으로 ‘커뮤니티 공동시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설계 및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 공동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 결과를 건축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공동시설을 갖추게 한다.
- 준비위원회가 주도하여 해당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 커뮤니티 공동시설 요구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준비위원회가 검토할 내용은 커뮤니티 공동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뿐만이 아니다. 공동시설을 마련할 구체적인 장소와 건축물의 내외 디자인 등 경관적인 요소, 건축 후 운영방안 등의 제반 측

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축물의 디자인과 운영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지식이나 선진적 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선진 사례를 견학하는 것도 필요하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준비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회의 준비, 회의결과 기록, 연락 등 준비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 주민요구 조사, 전문가 초빙 의견 청취, 선진사례 견학 등의 활동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2.3. 농어촌뉴타운 지역 발전계획

□ 목적

- 농어촌뉴타운 조성은 읍·면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하다.
- 농어촌뉴타운 조성 이후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등 제반 측면의 이슈들에 대한 주민들의 전망, 기대,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전략 안에 그 내용들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읍·면) 주민들이 향후 5~10년 후의 미래에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형성한다.
 - ‘○○면 발전위원회’ 등의 형식으로 토론 모임을 발족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 필요한 경우, 계획 과정을 지원할 전문가가 참여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토론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토론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비전과 개발 요구를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설문조사, 인터뷰, 주민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지역 주민들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 교통수단への 접근성, 주택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수렴한 개발요구를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다양한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수행한다.
 - 수립한 계획 내용을 문서화한다.

영국의 패리쉬 계획(Parish Plan) 보조금 제도

패리쉬는 영국에서 가장 하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위이다. 2000년에 발표된 영국의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는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2001년 3월부터 4년간 영국 농촌청(Countryside Agency)은 1,000여 개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패리쉬 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이 시범사업으로 한 패리쉬에 투입된 보조금은 평균 3,200파운드였다.

패리쉬 계획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지역사회가 향후 5~10년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러한 발전을 이루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는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측면의 이슈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패리쉬 계획 보조금 정책에서 계획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1) 어떤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2)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여 계획된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권장된다.



패리쉬 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는 제한이 없다. 특히,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급 상황, 교통수단에의 접근성 문제, 주택공급 문제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사업계획이 패리쉬 계획 과정을 통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1)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며, 2)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개발활동의 기반이 되며, 3)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실행을 위한 자금을 획득하는 지름길이며, 4) 패리쉬 의회의 지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자료: 송미령 등. 2006.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회의 준비, 회의결과 기록, 연락 등 준비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 특정한 사업내용에 관해서 주민요구 조사, 전문가 초빙 의견 청취, 선진사례 견학 등의 활동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2.4 멘토링

목적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과 지역 주민 간의 멘토링 관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조기 형성을 촉진한다.
-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수시적 상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입주자들이 빠르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 기존 지역 주민과 농어촌 뉴타운 신규 입주자 간의 1:1 멘토링 관계를 맺어 준다.
 - 귀농체험, 지역 주민 만남의 날 등 입주 전 프로그램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신규 입주자들이 적합한 멘토링 대상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 중 멘토링 관계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신규 입주자들의 특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합한 멘토링 대상 주민을 추천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지자체에서 약간의 비용 지원을 할 수도 있다.

3.3. 영농교육 프로그램

3.3.1. 기초 영농교육

□ 목적

- 농어촌뉴타운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 후에 생업으로 수행할 농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적 준비를 제공한다.

3.3.2. 영농법인 및 선도농가 연수

□ 목적

-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촌뉴타운에 입주한 이들의 영농능력을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배양한다.
- 독립적인 농업경영주로서 출발하기 전에,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품목에 대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농산물 선별 및 출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주요 내용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전입자들을 지역 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단체나 선도농가에 인턴쉽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 농업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자단체나 선도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수요를 알려주고 그것을 토대로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턴쉽 사원을 선발한다.
- 농업인턴쉽 지원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등)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토지를 취득하여 독립적인 농업경영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 신규 취농자는 인턴 사원으로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쉽을 끝마친 후에는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업법인과 협력하여 농산물을 출하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귀농촉진사업 및 농업인턴십 사업

1997년부터 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귀농 희망자들을 농업법인 등에 취직시키는 방식의 귀농촉진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박람회(Fair)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농업법인 등에 취직하는 것에 관심 있는 이에게 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농업법인 합동 회사설명회’를 개최했다. 그와 동시에 ‘신규취농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귀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 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에 성공한 이들은 스스로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여 인근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업법인과 협력하여 ‘농산물 공동판매’나 ‘연합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전국농업회의소 신규취농상담센터가 귀농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농지, 빈 집, 농기계 대여 등 필요한 시설 관련 정보와 시정촌마다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시책 관련 정보이다. 일상적인 상담업무 외에도 연 7~8회 대도시(동경, 오사카, 삿포로 등)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의 내용은 ‘농업법인 합동 회사설명회’, ‘시정촌의 지원 시책’, ‘현에서 파견된 상담원과의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사가 열리는 날 한 장소에서 여러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편이다.

시정촌의 귀농자 지원시책은 지역마다 그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지원시책이 전혀 없는 시정촌도 있지만, 귀농자에게 매월 15만 엔 가량의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정촌은 대개 조건이 불리한 원격지의 지자체이다.

전국농업회의소가 귀농 의향자들에게 제공하는 “신규취농자 전입시 지원정보”라는 자료집을 살펴보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시정촌이 2007년 현재 267개소에 달한다. 지원시책은 그 내용에 따라 ‘연수제도 운영’, ‘연수지원’, ‘영농지원’, ‘귀농자 대상 연수’, ‘주택마련 지원’, ‘정보 제공’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도 대학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같은 젊은 사람들 중 농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농업법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게 알선하는 ‘농업 인턴십’ 사업을 1999년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율이 더 높다. 아마도 여성들이 식생활, 식품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농업활동 체험을 통해 귀농의 길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 최근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일반 직장인들의 농업법인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OJT 연수사업’도 하고 있다.

자료: 송미령 등. 2007.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농업법인으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중에서 희망자를 조사하여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 인턴쉽 취업자에 대한 급여를 영농법인이 지급하겠지만, 그것에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3.4. 농어촌뉴타운 공동체 자치적 복지 프로그램

3.4.1. 지역 아동지원센터 운영

□ 목적

- 농어촌뉴타운 입주 가구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동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활동을 통해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주민과 신규 이주자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주요 내용

- 지자체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담당 부서 또는 추진기구의 주관 하에 ‘지역 아동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할 뉴타운 입주자를 공모한다. 이주하기 전에 교육 관련 직업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의 방과 후 활동 실태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의 조사와 진단을 수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아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용 수요를 검토한다. 이때 가능한 한 지역 내 학교 교사,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관련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 아동지원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조직하거나 지역 외부의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연수를 받는다. 지역 내에서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조직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 초등학교, 문화원, 읍·면사무소, 농협, NGO, 농업기술센터 등과 토의하여 지역아동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를 확보한다. 이때 지자체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무 구조를 갖춘다.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참여자 임금 등 경상비 재원 확보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읍·면 사무소 - 마을 이장 등의 행정조직과 학교를 통해 지역 아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 후 학교 교사, 아동지원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 등의 역할을 맡는 일정 수의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임금과 경비를 지급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지역 아동지원센터 운영 조직을 구성하기까지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토론 과정을 지원할 공공부문의 인적자

원이 필요하다(예: 시·군청 유관 부서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지급할 소정의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가 ‘지역 아동지원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배양하는 데, 비용과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3.4.2 재가노인 지원 활동

□ 목적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이 농촌지역 재가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노인 문제 해결은 물론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자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주요 내용

- 지자체의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담당 부서 또는 추진기구의 주관 하에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재가노인 지원 활동에 참여할 뉴타운 입주자를 공모한다.
- 지역의 재가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자료를 확보하고, 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 명단을 파악한다. 이 때 가능한 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관련 행정기관, 시민 봉사 단체 등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가노인 지원 활동 운영에 필요한 재무 구조를 갖춘다.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참여자 임금 등 경상비 재원 확보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한다. 지자체 사회복지 부문 예산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에 따라 김치 배달, 도시락 배달, 목욕 도우미 등 기초적인 지원에서 간병 등 비교적 전문적인 지원까지 다양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단기 교육과정을 조직하거나 지역 외부의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할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지급할 소정의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부 록 1

귀농 가구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농 및 지역사회 활동 사례

1.1. [사례: 진안-1] 진안군의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운영 사례⁷

1.1.1. 개요

- 진안군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서는 ①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기초조사 및 홍보 실시, ② 도시민 유입 촉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담당, ③ 귀농귀촌 연락처 지원, ④ 전문가의 컨설팅 등 정책전문성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서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⁷ 자료 출처: 구자인, 2007, “진안군의 마을개발사업: 농촌형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과제”, 진안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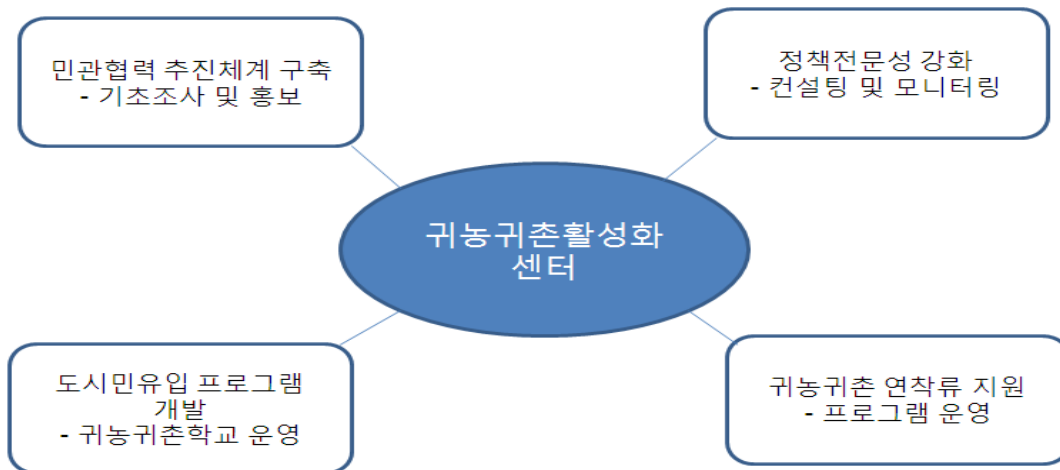
과 관련된 기초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소규모전원마을의 가능입지에 대한 국공유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서 ‘귀농 1번지’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함께 진안을 홍보함.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서는 도시민의 유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음.

- 지역 밀착형 맞춤형 ‘귀농귀촌학교’ 운영
-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및 마을체재 프로그램 운영
- 출향인 대상 고향사랑 프로그램 운영

부도 1-1. 진안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 또한,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연착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마을 이장 및 지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자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의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인 읍면별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한마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 내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융화되고, 안정적인 정착률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과 정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1.1.2 진안군의 귀농·귀촌자 지원 프로그램

가. 귀농전 단계

□ 지역농업·농촌의 이해

- 진안군은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상담,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담 컨설팅 인력 배치, 자료와 도서 제공
- 진안군은 '귀농1번지 진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착한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며, 온라인 상담과 빈집, 일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귀농설계 교육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빈집수리, 내손으로 집짓기, 구들 놓기, 대체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테마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다.

- 마을간사, 사무장, 매니저 등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체험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하여 텃밭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실제로 귀농귀촌자가 주택과 경작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2개월 현지에 거주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나. 귀농정착 단계

□ 지역주민과 친교 및 영농교류

- 귀농귀촌자의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집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융화를 위해서 귀농귀촌자의 집들이 비용을 진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의 개인역량 DB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지원한다.
- 농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서로 상생하는 목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 귀농귀촌인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별 모임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귀농귀촌 생활문화상을 지원한다.
- 읍면별 귀농귀촌인의 모임을 구축하여 신규 귀농귀촌자의 애로사항을 선배 귀농귀촌자의 도움과 지원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귀농귀촌자가 준비과정에서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해결 등의

사례를 생활문학으로 공모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 진안군은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귀농탐색, 귀농정착, 환류 등의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표 1-1. 귀농귀촌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단계 | 정책과제 | 세부사업명 |
|-------|----------------------|--|
| 입주전단계 | 1.추진체계 구축 및 기초조사, 홍보 | 귀농귀촌 활성화센터 활동 지원 귀농자 역량DB구축 및 활동지원 소규모전원마을 입지 및 국공유지 DB구축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귀농1번지 홍보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농어촌종합정보포털 지자체판 제작/운영 |
| | 2.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활성화센터 진단컨설팅(상근자) 마을간사제도 확대 실시 마을조사단 사업 확대실시 사회적일자리 발굴/모니터링 연구용역 |
| | 3.도시민 유입촉진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학교 귀농귀촌 설명회 전국 귀농귀촌 활성화 박람회 마을체재 귀농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출향인대상 고향사랑 프로그램 운영 |
| 정착단계 | 4.귀농귀촌 연착륙 지원 | 마을 이장 및 지도자 교육 귀농자 멘토링사업 귀촌클럽운영 귀농귀촌인의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자 읍면 만남의날 행사 귀농귀촌자와 함께하는 주민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자 생활문학상 공모 및 책자 발간 |
| 환류단계 | 5.정책전문성 강화 | 전문가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1.2. [사례: 홍성] 홍성군 홍동면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활동 사례

1.2.1 개요

- 1958년에 홍성군 홍동면에서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마을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농업기술학교이다.
-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와 농촌 지역 일꾼을 양성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학교 졸업생이 지역에 남아 농촌의 축적된 인적자원, 지역잠재력이 신협, 생협, 주민주도형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 풀뿌리 농촌 자치조직을 만들었다
- 이러한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귀농인 선호지역이 되어 많은 귀농인이 정착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귀농보다는 지역거점이 형성되어 귀농인들간의 교류, 다양한 문화,복지,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 귀농정착을 도와고 있다.

1.2.2. 지역사회 거점시설의 운영실태

□ 풀무학교

-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하며, 고등학교 과정 학교로 기숙사제 전인교육기관으로서 환경농업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전공부의 환경농업과는 2001년에 바른 가치관과 실제적 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을 기르기 위해 풀뿌리 주민대학인 2년제 전공과정을 신설하였으며,

홍동면 일대의 환경농업을 선도 하고 있다.

□ 풀무생협

- 풀무학교의 학생생활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1980년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 풀무생협은 초기부터 도농직거래를 시작하여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친환경농산물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채소류생산자와 250여명의 쌀농사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농자의 영농교류를 통한 기술 습득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 풀무신협

- 풀무신협은 1961년 풀무학교 교사와 졸업생 5명이 처음 시작해 1970년 지역주민과 함께 풀무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으며, 농촌지역 서민금융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풀무생협과 더불어 홍동지역 주민의식 향상과 농업구조개편,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마을 조성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축산을 시험사육하고, 배합사료 공급과 미생물 사료 및 비료등 유기농자재 개발 보급도 선도하고 있다.

□ 홍성여성농업인학교

- 홍동면에 위치한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홍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포함한 농촌생활 및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운영기관으로서 2001년 농림부 여성농

업인육성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 센터의 직원은 상근자 5명과 비상근자 10명으로, 대부분이 홍동면에 거주하는 토박이이거나 귀농·귀촌자이다.
-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홍동면 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을 알아보는 일부터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귀농 가정의 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센터의 강점은 직접 여성농업인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생활에 1차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 등 직원들이 일을 통해 해당 복지 업무를 익혀, 차후 홍성아동센터 등 지역내 동종업계의 타 기관의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반드시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비전과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풀무생협, (쌀)작목회, (주)이장, 에너지전환(풀뿌리 시민단체)등 이 지역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부표 1-2. 홍성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 내용 |
|-----------------------|---|
| 여성농업인고충상담소 | ◦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안내 |
| 여성농업인교육 | ◦ 여성농업인지위향상과 자아실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정책 ·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 전문농업경영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교육 · 농업경제 : 영농일지작성법, 가계 경영수지표작성, 농사경영 ◦ 지도력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관리법, 조직관리법 · 협동조합활동 · 자모회, 부녀회 운영 |
| 여성농업인취미교양활동 | 정보화교육, 풍물강습, 스포츠댄스, 짚풀공예, 종이접기/뜨개교실, 수지침/가정의학, 수목화그리기, 전통다도 ※짚풀공예품은 홍동의 특산품으로 개발, 농한기 농가소득사업으로 활용 예정 ※전통다도는 지역내 여성들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 작은도서관 |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2,000권 정도 구비 ※2002년도 8개월간 이용건수 7,000건 |
| 보육사업 | ◦ 영아전담반: 12개월 이후 24개월 이전의 영아반 운영 ◦ 일일탁아/특수탁아 |
| 방과후교실 | ◦ 농촌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 지도: 과제물지도, 질문에 답해주기, 요리활동, 풍물, 내가 만드는 동화책, 종이접기, 심성훈련, 관찰·역할극, 기계공작, 독서지도, 노래 등을 통한 인성교육 · 월1회 견학, 탐사, 체험학습, 캠프 등 ※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 |
| 중학생방과후교실 | ◦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활동과 보충교육: 주2회 영어, 주2회 수학, 매주 금요일은 특별활동(문화체험) ※중학교1학년 15명, 중학교2학년 15명 |
| 여성농업인자원봉사활동 및 소모임활동지원 | 독거노인밀반찬지원사업, 상담자원봉사, 도서관자원봉사, 풍물팀, 독서모임, 환경모임 |
| 도농교류사업 | ◦ 도시소비자들과 정기적 교류를 통해 연대감을 진작하기 위해 체험장 운영: 농사체험, 민속놀이, 민속공예품만들기, 전통식품만들기, 나물캐기, 밤줍기, 들꽃관찰하기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자료: 홍성군 홍동면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village/hd/pride/pride_13.jsp) 내용을 정리

1.3. [사례: 남원] 남원 산내면 실상사를 거점으로 한 귀농 사례

1.3.1. 산내면의 지역공동체 운동

- 산내면 일대의 지역공동체 운동은 불교사찰인 실상사가 중심이 되어 불교의 내적 성찰을 통한 공동체 회복운동과 우리 삶의 뿌리인 농촌, 농업을 살리려는 노력과 생명위기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대안문명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 지역공동체의 운영방향은 ①생명살림과 생명평화를 위한 운동, 자립과 협동,조화와 공생을 추구하는 소지역 도농공동체 운동, ②귀농자의 정착지원과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③유기농산물의 생산, ④가공판매,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⑤청소년,부녀자, 노인등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⑥농촌과 도시의 인적, 물적교류를 위한 협력사업 등이다.

1.3.2 지역 공동체 거점시설의 운영실태

□ 지리산 실상사

- 종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내면 일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 맞는 농촌 사찰의 역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실상사귀농학교

- 귀농자를 위한 귀농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립적인 귀농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 경험해보는 합숙 교육장으로서 1998년에 개설하였으며, 서울에서 진행하는 '불교귀농학교'가 있고, 심화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대략 2~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농사와 철학, 생태농업, 공동체, 여가 활용, 자치살림,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귀농예정자의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그 외, 실버귀농학교, 실상사 작은학교등을 통하여 다양한 귀농·귀촌계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산내 여성농업인센터

-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방과 후 학교, 산내들 어린이집, 주민건강사랑방, 생활문화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류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실: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과 가사, 건강, 자녀교육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 방과 후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학과공부, 숙제지도, 특기활동, 월별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과목은 담당 강사가 진행한다. 차량운행을 하여 등·하교를 시켜주며, 간식도 제공한다.

- 어린이집: 신생아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호 및 교육시설로서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한다.
- 주민건강사랑방: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
- 생활문화·교양강좌: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각종 생활문화 교양강좌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유기농산물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지리산 친환경 영농조합

- 사단법인 한생명은 2006년부터 실상사가 위치한 산내면 입석리에 20여만평의 대단위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망을 구축하여 쌀, 고추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지역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공동판매를 추진 중이다.

1.4. [사례: 장수] 장수군 하늘소마을 조성 및 운영 사례

1.4.1. 마을 조성배경과 과정

- 귀농을 준비하던 도시민들과 '순환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려던 장수군이 협력하여 2004년에 조성된 마을이다.
- 2003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귀농을 꿈꾸던 도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여 귀농을 준비하던 중 전북장수군이 '순환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공고를 보고 군과 접촉하여 협의한 끝에 귀농인들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장수군은 마을부지 조성과 도로·수도·전기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1.4.2 장수군의 지원내용

- 장수군은 순환농업 시범단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순환농업의 취지 동의여부, 시범단지 즉시 이주여부를 타진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귀농인에 우선권을 주었다. .
- 장수군은 군 예산으로 부지조성등 생활기반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지정, 사무장제도 등을 지원하였다.

1.4.3 마을의 운영 규약

-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지는 않으나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공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설정했다.
 - '하늘소영농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 마을에서 합의되지 않은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다.
 - 수세식 화장실을 건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세제

및 비누, 그리고 치약을 사용할 수 없다.

- 종이와 나무를 제외한 어떤것도 임의 소각할 수 없다
- 주택은 마을 구성원과 협의를 통해 적당 평수와 높이로 건축해야 한다

1.4.4 마을공동체 운영

- 입주한 주민들의 6개월간의 귀농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은 일반적인 농촌교육, 마을 만들기 교육, 농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도출되었다.
 -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간의 친목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서 삶을 꾸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장수군이 장수하늘소 마을에 '순환농업시범단지'사업권을 주고 영농조합을 구성케 함으로써 마을전체가 경제공동체로 생활이 가능케 했다.
- 마을 내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시도 하였으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전공을 살려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었다.

1.5. [사례: 함양-1] 함양군 청미래 마을

- 함양군 녹색대학 캠퍼스에서부터 2.5km 떨어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일대 약 38,000평 규모의 마을이다.
- 함양 녹색대학이 지향하는 생태적인 삶,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공유하려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그 공동체가 얻은 삶의 행복을 타인과 타 지역으로 확대시키려는 대안교육의 배후지로서 조성되었다.
- 유기농을 기본으로 하는 자립적 생태공동체를 유지하며, 농사, 집짓기, 살림살이, 품앗이 등 친환경적인 삶을 시도하고 있다.

1.5.1 함양 녹색대학

- 함양 녹색대학은 국내 최초의 대안대학으로 2001년 장회익 전 서울대 교수, 시인 김지하, 박노해, 문규현 신부, 환경운동가 장원 등 시민환경단체 인사 33인의 발기로 탄생하였다.
- 생태적인 삶을 사는 방법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내면의 생명력이 충만한 개인으로 살면서 동시에 사회를 생태적 공동체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는 것이 목적이다.
- 녹색대학은 비인가 4년제 과정으로 녹색 문화학, 녹색 살림학, 생명 농업학, 생태 건축학, 풍류 예술학 등 5개 학과를 전공영역으로 하고, 학생들의 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과목을 선정,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부를 하게 된다.

- 비인가 2년제 대학원 과정은 녹색교육학과, 자연의학과, 생태건축학과 등 3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각 전공 과정은 대학이 지정하는 녹색 필수 교과목을 2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5.2 청미래 마을 운영

- 마을 입주자는 녹색대학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녹색대학의 교직원, 학교교사, 건축가, 퇴직예정인 대학교수, 농민 등이 주 구성원이다.
- 입주자에게는 준농림지 700평, 임야 700평을 분양하고 9,000평은 녹색대학 농장 또는 마을 공동경작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가구별로 분양받은 준농림지 중 400평은 주택조성 및 텃밭이용을 위하여 일조권, 조망권, 접근성이 유리한 곳에 배치하고, 나머지 300평은 필요시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마을의 진입부에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방문객센터 등을 두고, 마을의 보조동성 3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필지를 배치하였다.

1.6. [사례: 산청] 산청군 안솔기마을

- 1999년 학교인근 준농림지 약 45,000평에 총 19세대 계획의 마을을 조성하여 2001년에 첫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8년 현재 세대가 입주해 있다.
- 입주자는 간디학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은퇴자들이 대부분이며, 입주자의 직업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6.1 간디 대안학교

- 1997년 산청에서 비인가 고교과정 대안학교를 개설하여 1999년 국내 최초로 대안학교를 인가받았다.
- 간디학교는 대안학교 배후에 대안적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마을이 곧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게 하는 대안문화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2 안솔기 마을의 공동체 운영

- 주민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 내규를 정하여,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을 목표로 정해 마을 관련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 설정하였다.
- 매월 1회 주민회의를 개최하며, 마을내 한의원에서 ‘경옥고’를 공동생산하여 그 수입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 마을 공동기금은 공동의 다양한 교육, 문화행사 개최등에 사용하여 공동체 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1.7. [사례: 완주] 완주군의 귀농지원센터

1.7.1. 완주귀농지원센터의 기능

- 귀농·귀촌희망자 상담
 - 귀농 욕구(건강, 교육, 정서적인 욕구 등), 귀농에 따른 준비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귀농 정착 단계 안내
- 귀농 관련 지역정보 제공
 - 빈집, 농지, 기관, 귀농 관련 교육, 교육 기관, 귀농지원 정책, 일자리 정보 등
- 귀농 정착 지원
 - 집들이·집수리 지원, 영농 상담, 귀농자 - 지역 주민 교류 지원, 자조 모임 형성 및 운영 지원 등.

1.7.2. 완주군의 귀농·귀촌자 지원 프로그램

가. 귀농전 단계

□ 지역농업·농촌의 이해

- 귀농희망자 지역 탐방 프로그램 및 귀농 관련 상담
 - 전담 컨설팅 인력 배치, 지역 탐방 안내 및 정보 제공(빈집, 농지,

교육시설, 지역 정보 등)

-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선배 귀농자, 귀농 후원농가 등을 연계한 수시 귀농체험 프로그램
- '완주 귀농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 운영
 - 정착한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며, 귀농관련 지역 정보, 일자리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완주군청, 농민교육원과 연계한 귀농 상담 및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귀농설계 교육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욕구 조사 후 귀농 성공농가 농장, 지역 선도농가 농장과 연계한 영농실습
 - 단기, 장기(6개월 이상)
-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소개
 - 지역 단체 간사, 사무장, 기관 업무 등의 일자리 소개 등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체험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하여 텃밭과 함께 제공(귀농사랑방 운영)
 - 실제로 귀농귀촌자가 주택과 경작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2개월 현지에 거주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와 귀농교육, 귀농지 탐방 등을 연계 실시

나. 귀농정착 단계

□ 지역주민과 친교 및 영농교류

- 귀농귀촌자의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집들이 지원
 -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융화를 위해서 귀농귀촌자의 집들이를 할 때 지역 귀농자, 지역 주민 등 초청 연락, 생활 물품 제공, 인적 교류 기회 제공
- 귀농·귀촌자와 지역 주민간 친교 및 화합을 위한 모임 주선 및 지역 모임 소개 및 참여 유도.
 - 고산지역농업혁신연구회, 종교단체(울고교회, 고산성당 등), 완주문화원, 동호인 모임(차모임, 만경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산행 모임 등), 농산물 가공 모임, 친환경작목반(땅기운작목반, 고산딸기작목반, 고산꽃감연합작목반등)
- 귀농인 자조 모임(비움영농조합, 비움생협 등), 끼리끼리 귀농인 모임 조성, 목요사랑방 모임(초등학교 부모 모임) 등 운영.
- 귀농귀촌인의 개인역량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지원
 - 농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귀농귀촌자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서로 상생하는 목적으로 정보제공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고산농협, 비움영농조합, 완주시니어클럽, 완주문화원, 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친환경작목반, 지역 사설 교육기관, 고산산촌유학센터, 종교단체 등)
 - 완주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영농 교육 및 특성화 교육 참여(농산물 가공, 농촌 체험 관광, 천연염색 등)를 통한 창업 기회 확보

-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 농산물 판매 지원 및 인적·물적 정보 교류 마당

- 일손이 필요한 지역농가와 귀농자 연결하기
 - 일손 지원, 소득 지원, 영농 체험 및 교류 기회

부 록 2

일본 농촌지방자치단체의 귀농 지원 프로그램⁸

1.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책 -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사례

1) 농업연수지원

(1) 농업체험연수

농업체험연수란 오카야마현 내에서 농업을 하고자하는 비농가출신으로 소규모농업을 목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제도이다. 연수과정은 농업경영업적이 우수한 선진농가에서 약 한 달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농사일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연수제도를 받은 자 중 90여명이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 ①모집대상 : 55세미만으로 오카야마현 내에서 농업을 하고자하는 비농가 출신자.
- ②모집기간 : 매년 6월
- ③모집인수 : 약 20명
- ④연수기간 : 약 1개월 (9월~10월)

⁸ 이 내용은 송미령 등(2007)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자료집 초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유학렬과 조영재의 글임을 밝혀 둔다.

- ⑤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에 의해 결정
- ⑥연수내용 : 선진농가에 실제적으로 체재하면서 농사일과 농촌생활 등을 체험
- ⑦연 수 비 : 없음 (단, 연수기간 중의 상해 보험료는 연수생이 부담)

(2) 농업실무연수

앞서 설명한 농업체험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이며 연수기간은 2년 이내이다. 연수내용은 우선 전문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다. 또한 낯선 농촌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방법 등도 배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경영체로서 안정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수비용은 연수기관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므로 연수자 개인부담은 없다.

①신청자격

- 신규참여 형 : 앞서 설명한 (1)농업체험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 U턴 형 : 55세미만의 농가출신자로 양친 등 농업경영주로부터 농업경영을 분리해 새로운 경영형태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

②신청방법 : 법 규정에 의거하여 취농계획서⁹를 작성, 관할 縣지사(우리나라의 도지사에 해당)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 후 귀농하고자 하는 市町村이 지정하는 연수사업기관에 연수를 신청한다.

③연수기간 : 신규참여 형은 2년 이내이며 U턴 형은 1년 이내.

④연수내용

- 기초연수 : 농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 연수.
- 응용연수 : 실제적으로 포장이나 시설에서 행해지는 실천연수 및 선진농가파견

9 취농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계획서에는 취농목표, 농업연수경험 및 계획, 취농준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입.

연수.

○ 사업소연수 : 농협 등 관련기관에서의 영농연수 및 지역주민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

⑤연수기관 : 농협, 농업생산법인, 市·町·村농업공사

⑥연수비용 : 월 15만엔 정도(약 120만원)이며 전액 보조를 받는다.

부표 2-1. 농업체험연수 및 농업실무연수를 통한 귀농까지의 프로세스

| 시 기 | 주 요 내 용 |
|-------------------------------|---|
| 농업체험연수 신청까지 (매년 5월까지) | 1. 귀농상담 2. 농업·농촌의 체험 3. 영농계획 검토(가족동의, 자금준비 등) 4. 선진농가 방문 5. 귀농예정지 및 재배작목 선정 |
| 6월말까지 | 1. 농업체험연수사업신청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2. 귀농 오리엔테이션 신청서 제출 |
| 7월 상순 | 오까야마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
| 7월 중순 | 각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지역견학 포함) |
| 7월 하순 ~ 8월 상순 | 각 지역별 면접 |
| 9월 ~ 10월 | 농업체험연수 실시(1개월간) |
| 농업체험연수종료 후 ~ 농업실무연수개시 전 | 1. 귀농계획 신청 ⇒ 인정 2. 주거 및 농지 확보 3. 농업실무연수 신청 ⇒ 인정 4. 귀농예정지의 주민들과 사전 친목도모 |
| 다음해 4월 | 실무연수개시(2년 이내) |
| 2년 후 | 귀농개시 |

이밖에도 신규귀농 또는 정년귀농을 하고자하는 자를 위해 오까야마현은 다양한 농업연수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65세미만의 정년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인귀농연수」 및 자격제한 없이 누구라도 참가 가능한 「지

역귀농공부방」, 「일요일귀농세미나」 등이 있다.

부표 2-2. 오카야마현 귀농지원을 위한 연수

| 연수명(대상연령) | 연수장소 | 연수내용 | 연수기간(연간) |
|---------------------|--------------|------------------|------------------------|
| 사회인귀농연수 (65세미만) | 농업대학교 | 각종 농업기술 연수 | 60일간 |
| 지역귀농공부방 (제한 없음) | 기초자치단체 농협 |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기술 연수 | 5일~15일간 |
| 일요일귀농세미나 (제한 없음) | 체험학습농원 | 농업의 기초지식 및 기술 습득 | 9일간 |
| 청취생제도 (제한 없음) | 농업대학교 | 농업대학교 수업의 자유청취 | 20일~30일간 |
| 신규귀농자연수 (제한 없음) | 농업대학교 | 신규귀농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 | 기초연수:10일간 전문연수:15일간 |

자료출처 : 오카야마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사회인귀농연수

이 연수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과수, 야채, 화훼 3코스가 설치되어 있다. 연수대상은 65세 미만이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며 매년 응모가 급증하고 있기에 2006년부터는 모집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렸으며 연수일수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다. 연수 장소는 오카야마현 농업대학교이며 연수비용은 각 코스별 1만 엔(약 8만원)이다.

(4) 지역귀농공부방

오카야마현 내의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 및 JA(일본농업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연수제도이다. 귀농공부방의 유지·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중 50%를 오카야마현이 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운영주체인 市·町·村 또는 JA(농업협동조합) 등이 부담 한다. 연수기간은 5일~15일간이다. 2006년 현재 오카야마현 내 8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연수비용은 무료이다.

(5) 일요일귀농세미나

이 세미나에서는 채소, 벼, 화훼 등의 초보적인 재배방법에 대해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장소는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농원이며 참가자의 연령제한은 없다. 연수비용은 9일간(9회) 1,700엔(약 14,000원)정도로 무척 저렴하다.

2) 귀농자금지원

(1) 취농연수자금

귀농연수자금은 농업대학교 및 각종 연수교육시설, 국내외 선진농가 등에서 농업연수를 받을 경우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대부한도액은 연수교육 및 국내외시찰일 경우 월 5만엔,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일 경우는 최고 200만엔까지이다.

(2) 귀농준비자금

이 자금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개시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즉 귀농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비용, 주거이전비용, 영농에 필요한 자격증취득비용 등이 지원자금 대상이 된다. 대부한도는 최고 200만 엔까지이다.

부표 2-3. 오까야마현 귀농지원자금의 종류

| | 귀농연수자금 | 귀농준비자금 | 귀농시설자금 |
|----------|--|------------------------------|---|
| 사용 용도 | 수업료, 교재비, 시찰연수비 | 주거이전비, 자격취득비, 관련서적구입비, | 시설설치비, 기계구입비 비료구입비, 농약구입비 육묘구입비, 농기구수선 비 |
| 대부 한도 | 1. 연수교육 : 월 5만엔 2. 국내외시찰 : 월 5만엔 3.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 : 200만엔 | 200만엔 | 1. 청년 : 3,700만엔 2. 中高년 : 2,700만엔 |
| 대부 기간 | 1. 연수시설 : 청년-재학기간, 中高 년-1년 2. 국내외시찰 : 청년-2년, 中高년 -1년 3.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 : 청년만 해당-1년 | | 경영개시 후 5년간 |
| 상환 기간 | 1. 청년 : 4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9년 거치 20년 상환 이내 2. 中高년 : 2년 거치 7년 상환 이내 ※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5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 | 5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
| 대부 대상 | ○ 인정취농자 : 縣知事(도지사)에 의해 취농계획을 인정받은 자 ○ 연령구분 : 청년-15세 이상 40세미만 中高년-40세 이상 65세미만 | | |
| 대부 담당 | 오까야마현 청년농업자육성센터 | | 농협 등의 일반금융기관 |

자료출처 : 오까야마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귀농시설자금

귀농시설자금이란 실제적으로 농업경영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시설설치비용 및 농기계구입비용, 비료·농약구입비용 등에 대해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대부한도는 40세미만의 청년인 경우 3,700만엔, 40세 이상 65세미만의 中老年인 경우는 2,700만엔이다. 대부기간은 농업경영개시 후 5년간이다.

2.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책 - 아오모리현(靑森縣) 쓰루다마치(鶴田町)의 사례

1) 농업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제공

(1)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전문적인 영농지식 및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및 기술들은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사(農業經營士)」 및 「청년농업사(靑年農業士)」에 의해 전수되어지며 현재 쓰루다마치에는 2명의 농업경영사와 4명의 청년농업사가 있다.

(2) 쓰루다마치에는 69명의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로 구성된 「인정농업자협의회」라는 귀농지원단체가 있다. 협의회에 속에는 논농사부회, 과수부회, 채소부회 등 여러 분과조직(부회)이 있으며 각 부회에서 귀농자를 위해 농업재배기술 및 농업경영에 대한 노하우 등을 수시로 가르치고 있다.

(3) 각종 연수시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돼 있다.

☞ 「농업경영사(農業經營士)」

1. 정의 : 지역농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선구적이고 중핵적인 농업경영자.
2. 자격 :

- ①자립적으로 농업을 경영 하고 있는 자,
 - ②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관리능력, 농가생활이 일정수준이상의 자,
 - ③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공헌도 및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자.
3. 역할 : 지역사회활동의 리더 및 농업 진흥을 위한 협력자, 농업지도자

☞ 「청년농업사(靑年農業士)」

1. 인정요건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인정(1994년, 개정).
 - ①농업자연수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졸업과정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연수를 복수한 자. 그 외 도지사가 상기와 동등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 ②일정의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도 농업경영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후계자로서 가능 성이 있는 35세미만의 자.
 - ③농촌청소년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2. 활동내용 :
 - ①농촌청소년 집단 활동의 촉진 및 지원활동.
 - ②교류회 및 연수회, 학습회 등을 개최, 지원활동
3. 실시상황 : 2001년 현재 9,589명(그 중 여성이 151명)의 청년농업사가 있음.

☞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제도

: 이 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심사과정을 통해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자치단체장은 인정농업자로서 인정해 줌. 인정농업자는 일반농업인보다는 우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영농 및 생활비확보를 위한 지원

(1) 「농업후계자신규취농조성사업」

이 사업은 농업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엔을 1년간(총액 60만 엔) 지급하는 것이며 2006년도에 21명이 혜택을 받았다

(2) 「농업경영기반확립지원조성사업」

이 사업은 의욕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내용은 각종농업제도자금을 대부분아 농업경영개선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이자조성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3) 농지 및 영농시설, 주거 확보를 위한 지원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지역이 정해지고 영농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농지구입 및 주거확보, 영농시설, 농기계구입 등의 준비가 요구되어 진다.

쓰루다마치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농업위원회가 농지를 알선 및 소개를 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농가에서는 여유가 있고 불필요하게 된 중고농기계를 판매 또는 대여해 주고 있다. 더불어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자치단체가 町營주택을 알선해 주는 는 세심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4)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대책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에서 정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분명 쉽지 않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주민들과의 연대가 무척 중요하다. 즉, 기존 주민들과의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며 때로는 공동작업, 마을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마을의 실정과약과 주민들과의 융화가 요구된다. 쓰루다마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주민과 새롭게 이주해 온 귀농자와의 친목도모 통한 지역융화에 노력하고 있다.

(1) 새롭게 이주해 온 귀농자에게 농업후계자들의 모임인 「쓰루다마치 녹색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각종 농업연수는 물론 학습회, 선진지역시찰 등을 연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기존의 농업인과 신규농업인과의 친목도모도 꾀하고 있다.

(2) 귀농자에게 이 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각종 농업생산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채소, 화훼, 메론 등 다양한 작목의 생산단체(작목반)가 있어 관심 있는 작목에 맞게 생산단체를 선택, 가입 할 수 있다.

(3) 「농업경영이동상담실」이 개설돼 있어 농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 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참고 문헌

- 고순철 등. 2005.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방안」.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김정원·진명숙·박순영. 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연구」. (사)호남사회연구회.
- 김정섭. 2008. “함양군 서하면 귀농가 사례조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김정호. 199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2007.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가꾸기: 경관관리와 인구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 마상진. 2006.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요인.” 「농촌경제」 29(3): 33-50.
- 박문호. 1998. “일본 신농정의 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21(3)
- _____. 2006. 「지방농정 및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7.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영농조직 모형 및 지원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
- _____. 2009. “완주군 귀농지원센터 사례조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성주인. 2008a.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8b. “홍성군 귀농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공동체활동 사례조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성주인·김정섭·박경철. 2006. “장수군 하늘소 귀농자 마을 조성 사례조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송미령·박석두·성주인·김정섭·박경철.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종철·이우곤·김정연·유학렬·조영재·김정섭. 2007.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가꾸기: 경관관리와 인구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 송미령·김정섭. 2008. 「지자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임경수·전호상. 2006. 「귀농·귀촌 이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호섭·박동규·이영대. 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임경수·전호상·김종구·심수영·김도희. 2006.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
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이장.

채종현·박주영·김정섭. 2007.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와 3차산업 분포.” 「농촌경제」
제30권 제1호. pp.109~127.

허주녕·김정섭. 2008. “진안군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사례조사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내부자료.